23일 MARKET INDEX

코스피	-5.98	2,701.69
코스닥	-0.21	773.26
환율(원/달러)	-6.70	1,328.00

에너지경제

25일 ENERGY INDEX

휘발유(원/리터)	1676.85 ▼	(-0.67)
경유(원/리터)	1514.18 ▼	(-1.06)
LPG(원/리터)	1016.67 ▼	(-0.01)

(전국 평균) 출처=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WTI(달러, 23일) 74.83 ▲ (+1.82)

제3589호 | 1989년 5월 26일 창간 35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 www.ek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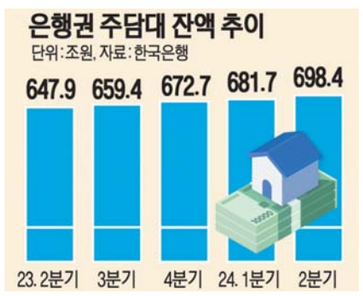
가계부채 잡기에 銀 독과점 해소안 '뒷전'

금융당국, 가계대출 잡기 혈안
시중은행 대출 확대 부담 작용
인뱅 주담대 쏠림 현상도 저격
제4인뱅 기업대출도 불확실 커
은행 독과점 해소 방안 회의적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혈안이 된 가운데 당국 주도로 추진되는 시중은행 독과점 해소 방안을 두고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발표된 독과점 해소 방안은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를 등장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새 플레이어들은 초창기 성장을 위해 대출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당국 눈치에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더구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열기는 한풀 꺾였고,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특화전문은행 확산 등의 방안은 진전이 없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2분기 국내 가계 빚은 1896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당국 압박에 시장금리 하락 속에서도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여왔는데, 이제는 한도 축소 등 금리 외 방법으로도 대출 관리에 들어간다. 사실상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확대하기에 부담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당국의 모든 관심이 가계대출에 쏠리면서 지난해부터 추진되던 시중은행의 독과점 해소 방안의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 당국은 새 플레이어들이 은행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공언했지만, 지금은 되레 은행이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당국은 지난해 7월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겠다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중·지방·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활성화, 특화전문은행 확산과 인터넷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래픽=오찬영 기자 chanyoh@ekn.kr

이후 탄생한 것이 지금의 iM뱅크(옛 DGB대구은행)다. 지방은행이었던 당시 대구은행은 곧바로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했고 지난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iM뱅크가 당장 시중은행 사이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현재 시중은행 대비 iM뱅크의 체급은 7분의 1 수준으로 작아 시중은행을 자극시킬 만한 영업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없고, 여기에 가계대출 조이기가 지속되면 대출 자산을 확대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지방은행은 아직 주담대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관리를 강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으로 확산되면 지방은행들도 결국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새로운 제4인터넷은행 등장을 준비하면서도 카카오·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신규 플레이어들의 부담도 키우고 있다. 앞서 카카오·케이뱅크는 다른 은행들보다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공급했고,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작되자 수요자들의 대출 금리를 낮춰줬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다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쏠림이 심해지자 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영업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 대출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담대와 같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때는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다가 한순간에 비판의 대상이 되니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iM뱅크나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등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들은 가계대출 대신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기업대출은 대출 과정이 더 까다롭고 건전성 관리도 어려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란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중심의 영업으로 성공한 금융사가 없다"며 "결국에는 가계대출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잡아가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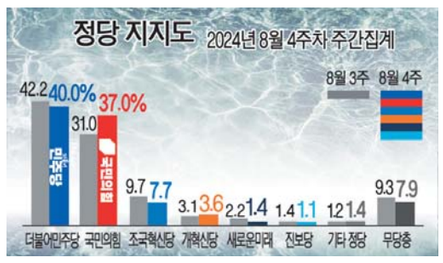
더구나 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열을 올리면서 독과점 해소 방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에는 인터넷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제4인터넷은행은 김 위원장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M&A, 특화전문은행 확산 등 신규 플레이어 확대를 위한 방안은 특별한 논의가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8월 넷째 주 정기 여론조사



尹, 국정수행 긍정 30.0%…0.7%p↓



김베티 기자 seuk22@ekn.kr

민주당 지지율 40.0%…2.2%p↓
국힘 37.0%…양당 격차 3.0%p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양당 간 차이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5일 발표한 8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 한다"는 긍정 평가는 30.0%(매우 잘함 13.9%, 잘하는 편 16.1%)로 집계됐다. 전주 30.7% 대비 0.7%포인트(p) 하락하면서 30%대에 턱걸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초까진 소폭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35%대를 앞두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전후로 벌어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상태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6.4%(매우 잘못함 55.9%, 잘못하는 편 10.5%)로 전주(65.4%)보다 1.0%p 높아졌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36.4%p로 오차범위 밖이다.

권역별로 긍정평가는 △서울(4.2%p↑) △인천·경기(1.2%p↑)에서 오른 반면 △대구·경북(1.0%p↓) △대전·세종·충청(3.0%p↓) △부산·울산·경남(5.5%p↓)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2.2%p 하락해 40.0%, 국민의힘 지지도가 6.0%p 올라 37.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소폭 하락, 국민의힘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3.0%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2.0%p 낮아지면서 7.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개혁신당은 0.5%p 상승한 3.6%였고, 새로운미래 1.4%(0.8%p↓), 진보당 1.1%(0.3%p↓)가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1.4%p 하락한 7.9%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지지도 조사는 19~23일 닷새간, 22~23일 이틀간 각각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8%,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6명과 1000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스라엘 공군에 무력화 되는 헤즈볼라 무인기 이스라엘군이 25일(현지시간)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공격 조짐을 포착했다며 선제 대응 차원에서 전투기를 띄워 레바논 내 표적을 공습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직후 헤즈볼라는 지난달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을 개시했다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이스라엘 공군이 요격한 헤즈볼라 무인기. AFP=연합뉴스

파월, 9월 '금리인하' 신호탄 쐈다…'빅컷'도 문 열려

〈0.50%p 금리 인하〉

잭슨홀 연설서 "시기 왔다" 공식화
2년5개월만 '물가 전쟁' 종료 선언
8월 노동시장 약화땐 빅컷도 가능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개시하겠다는 확실한 발언을 내놨다. 이번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던 2022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공식화한 셈으로, '물가와의 전쟁' 종료를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2·11면】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와이오밍주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통화정책이 조정될 시기가 왔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고 들어오는 경제지표, 변화하는 경제전망, 리스크 균형에 따라 인하 시점과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경제 여건 변화에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파월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내 확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여건이 추가로 냉각되는 것을 추구하거나 반기지 않는다"며 "정책입안자들은 가격 안정을 향한 추가 진전을 이루면서 강한 노동시장을 지지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22년 이후 이뤄졌던 연준의 고된 물가와의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셈이다.

연준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면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다. 그러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 최악의 수준까지 치솟자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금리를 0.0~0.25%에서 5.25~5.5%로 끌어올렸고 지금까지 이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연준은 2022년 6~11월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 만 4차례 연속 단행하는 등 과격한 긴축 정책을 펼쳤다.

시장은 이미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을 충분히 예견해왔지만, 예상보다 선명한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개시 신호에 환호했다.

이에 따라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쏠리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여전히 연준이 9월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있지만 파월 의장의 연설 후에도 빅컷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다음 달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약화가 재확인될 경우 빅컷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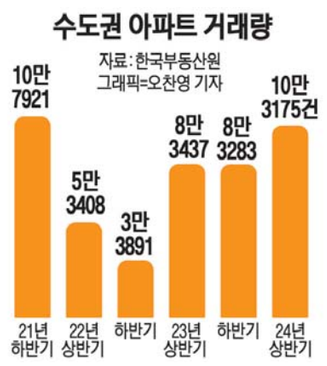
자산운용사 핌코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폴 매컬리 조지타운대 겸임교수는 CNBC 인터뷰에서 "내 기본 전망은 연준이 다가오는 여덟 번 회의에서 금리를 25bp씩 인하하는 것이지만, 성장세 약화, 특히 노동시장 약화가 관찰된다면 50bp 인하로 완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도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향은 분명하다'는 언급은 현시점에서 복수의 25bp 인하가 예상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50bp 인하의 문도 열려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도권 아파트 매매건수, 지방 앞섰다

상반기 10만3175건…서울 3배↑
거래 비중도 50.5%…3년여만 추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체 매매건수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지방 아파트 매매건수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부동선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6월 2만1888건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는 올해 1월 1만2083건에서 2월 1만3671건, 3월 1만6184건, 4월 1만9507건, 5월 1만9842건 등으로 계속해서 높아졌다.

이 중 서울은 올해 1월 2456건에서 6월 615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월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7.6%에서 2월 41.0%, 3월 40.2%, 4월 44.2%, 5월 45.8%에서 6월 50.5%로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방 매매 건수를 앞선 것이다. 이는 2021년 2월(50.4%)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활발한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2.67%, 인천은 1.03%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가격은 0.23% 하락했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0.82% 올랐다. 이 기간 지방은 1.26% 내렸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거래가 확연하게 증가하며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수도권 위주로만 매수세가 활발하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수도권 위주의 매수세 쏠림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전기요금제 개편' 논란 재점화

이슈분석

7~8월 무더위에 냉방 전력사용 급증…전기누진제 개편 제기
가구당 월 사용량 300kWh 넘어 기본으로 누진제 2단계 진입
"가정용 누진제 완화 부담 줄여야 vs 한전 전기요금 인상이 우선"

7~8월 무더위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며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전의 재상태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은 300킬로와트시(kWh)를 넘어 기본으로 누진제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현행 누진제는 kWh당 120원(1단계)→214.6원(2단계)→307.3원(3단계)→736원(슈퍼유저)로 이뤄져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재의 누진제가 국민의 생존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필수 재화인 전기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진 요금규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당국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2016년 100킬로와트시(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개편했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정부는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행 누진제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누진배율을 축소한 누진제 완화 방식과 누진제 전면 폐지 후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진제 개편과 누진 구간 확대, 2019년 하절기 (냉방비) 바우처 도입 등으로 저소득층 역시 어느 정도 냉방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며 "오히려 현재보다 (누진) 배율을 낮추거나 (누진제 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여도 일상용은 물론이고 냉방용 수요 역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기요금 수준이 지금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누진제 완화, 단일요금제도가 국민부담은 줄여줄 수 있어도 한전과 전력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전에 따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전체의 평균을 100이라고 할 때,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54, 산업용 전기요금은 66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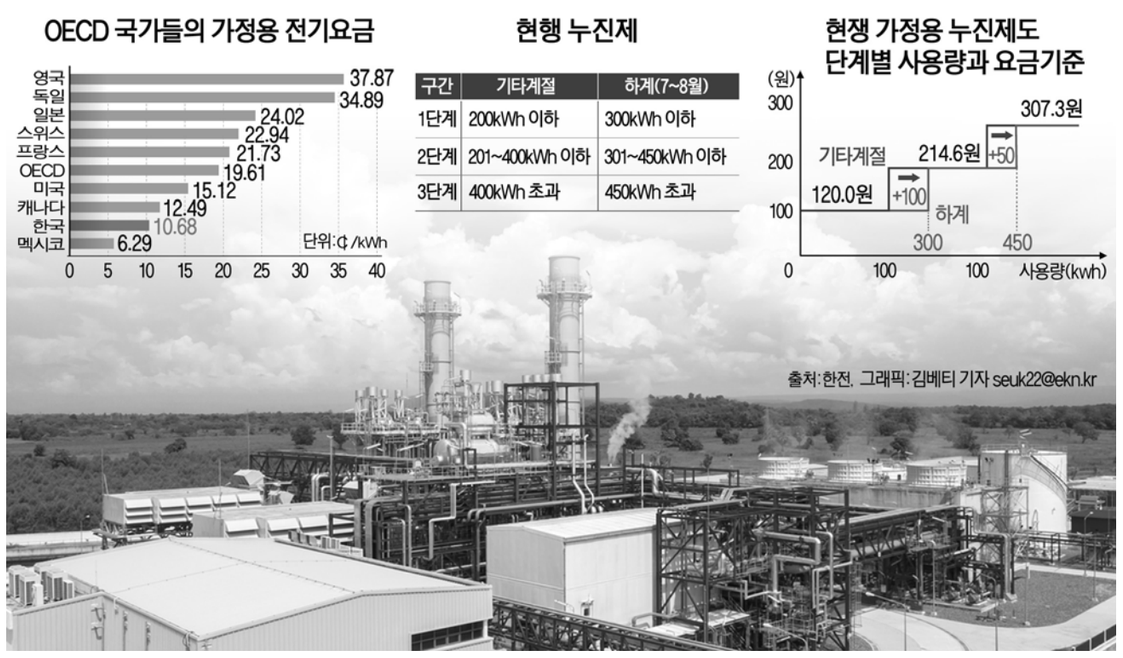
주택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에서 모두 4번째로 저렴한 수준이다. 산업용과 주택용 모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타당성이 실리는 수치다.

한전 관계자는 "비합리적인 누진제는 개편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만 이미 저렴한 주택용 전기요금을 더욱 완화하기에는 한전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자 가정용 뿐만 아니라 교육용, 농업용 등 각종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누진제보다 용도별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농업용, 교육용이라고 무조건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하패턴, 공급전압, 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 정상화를 위해 경영 쇄신은 물론 중장기적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 개선과 저소득층 냉방 수요 충족을 위한 지원 확대가 동시에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무조건 인하해 달라가 아니라 한전 총괄원가, 용도별 요금 기준 및 산정내용 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잭슨홀 무사히 넘긴 증시, 기대감 이끌 다음 이슈는

9월 금리인하 기대 화답한 파월 "통화정책 조정시기 도래"
연설후 뉴욕 증시↑… 엔비디아·경기지표·엔캐리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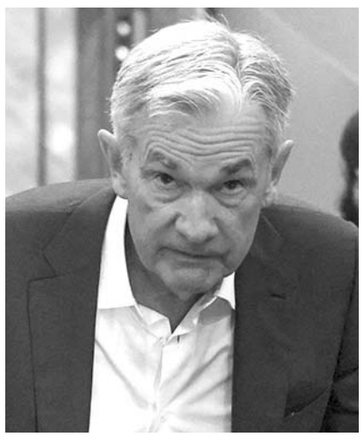
국내 증시를 향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강력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증시 반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주 내내 경계감에 주춤하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해당 발언이 있은 직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단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엔비디아 실적 및 경기지표 등 향후 이벤트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2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뉴욕 증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4% 오른 4만1175.08로 장을 마쳤다, 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5% 뛴 5634.61을, 나스닥종합지수는 1.47% 급등한 1만7877.79로 거래를 종료했다.

이는 같은 날 파월 의장의 발언이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9월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잭슨홀 미팅 이전부터 이미 금리 인하는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금리 인하 여부보다 금리 인하 폭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25bp(1bp=0.01%)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빅 컷(기준금리 50bp 인하)' 가능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서다. 이날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9월 25bp 인하 가능성을 75%, 50bp 인하 가능성을 25%로 내다봤다.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완화된 만큼, 국내 증시도 다음 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코스피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세를 보이며 하락, 2700선을 간신히 지키는 데 그쳤다. 지난 한 주 코스피 거래대금은 일평균 8조946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7월 거래대금(12조337억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하지만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던 뉴욕 증시가 반등한 만큼 코스피도 같은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AP=연합뉴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보다 다른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지수에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됐고, 실질적으로 경기 연착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달 28일 발표될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와 수요를 점검할 기회로 보인다.

또 30일에는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이, 9월 6일에는 8월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같은 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및 카멀라 해리스 미 대선 후보의 첫 토론회가 열리는데, 주요 주제가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주식시장은 추가 인하 여부보다는 업종이나 기업 펀더멘탈에 보다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8월 초 증시 급락을 야기했던 엔 캐리 청산 압력은 현재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다는 의견이다. 오는 9월 18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20일에는 일본은행(BOJ)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폭, BOJ의 통화정책 스탠스에 따라 엔화 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 캐리 청산이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은 8월 초보다 축소될 것"이라며 "단 매년 9월 나타나는 유동성 위축을 감안할 때 제한적인 엔 캐리 청산 매물에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국민연금-SK, 또 다시 충돌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반대표"
11st 투자 이후 연이은 갈등
"지배구조 개선 촉구하는 것"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SK그룹과 국민연금 사이의 오랜 '악연'이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측의 대립이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vs SK, 끊이지 않는 갈등의 역사

26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은 다시 한 번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합병 비율(SK이노베이션 : SK E&S = 1 : 1.1917417)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 합병 비율대로라면 국민연금 등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기관과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중이다. 실제 국민연금도 이 합병이 SK그룹 대주주의 이익은 보호하지만, 자신들을 포함한 일반 주주들에게는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SK그룹과 국민연금의 '악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국민연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주)의 대표이사로 복귀하려 하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창업주 손자인 최 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이후 2018년 11번가 투자 실패는 양측 관계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 국민연금은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H&Q 코리아 등과 함께 11번가에 5000억원을 투자했다. 11번가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SK그룹이 11번가의 기업공개(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11번가에 대한 콜옵션까지 포기해버린다. 결국 FI들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11번가의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아직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을 분리해 SK온을 설립할 때도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SK그룹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할을 강행했고, 이는 양측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SK와 국민연금, 유독 각별한 '악연'

일련의 이슈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SK에 대한 불신의 폭을 키우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번가 사태 이후 국민연금은 SK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꾸준히 줄여왔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국민연금 지분이 2020년 11%대에서 현재는 6.28%까지 떨어졌다. 이 외 SK가스, SKC, SK리츠 등 다른 계열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SK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불신이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실제 투자 철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SK그룹 입장에서는 주요 기관투자자의 이탈로 인한 자금조달 악화와 주가 하락 압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SK그룹과 국민연금의 관계는 다른 대기업 그룹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나쁘다는 평가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는 부적절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SK그룹과 달리 '찬성'으로 인한 논란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SK그룹에 비해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낮았다. LG그룹이나 롯데그룹과의 관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SK온의 분할 등 SK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과 큰 차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NCM→LFP 전환기…대응 늦은 K-배터리, 경쟁력 있을까

LFP배터리, 높은 '화재안정성'으로 소비자들 관심 집중
K-배터리, 고객사 확보·신규 소재 추가 등으로 경쟁력↑

연이은 전기차 화재에 배터리 트렌드가 성능 우선 니켈·코발트·망간(NCM)에서 화재안전 우선 리튬·인산·철(LFP)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업계도 그간 미뤄왔던 LFP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선 '너무 늦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업계는 신규소재를 섞어 고품질 배터리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예정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발생한 3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차량엔 모두 NCM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NCM배터리는 LFP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으로 그간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여 왔다.

특히 높은 가격, 긴 주행거리 등을 통해 'NCM배터리 전기차가 더 고급차'라는 인식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 국내 배터리 업계도 NCM 배터리 개발에만 집중해왔다. 값싼 LFP배터리 대비 수익성이 월등했기 때문이다.

베터리 업계 관계자는 "LFP배터리는 낮은 단가로 인해 돈이 되지 않는다"며 "NCM배터리의 개당 마진과 LFP배터리의 마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외면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3건의 NCM배터리 전기차 화재로 LFP배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LFP배터리는 NCM 대비 성능은 떨어지지만 '화재안정성'이 높기 때문이다.

LFP배터리는 화학 구조적으로 NCM보다 안정적이다. 일반적인 배터리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충격이나 과열에도 쉽게 열폭주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물질과의 반응성이 낮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LFP배터리가 탑재된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추돌 사고시 승용차 앞부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옮겨 붙어 차량이 전소됐음에도 열폭주,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LFP배터리 시장은 중국의 텃밭이다. CATL, BYD 등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LFP배터리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업계는 신규소재 첨가, 적극적인 고객사 확보 등을 통해 추격에 나설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프랑스 르노그룹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첫 대규모 수주를 성공했다.

공급기간은 2025년 말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전체 공급 규모는 약 39GWh다. 이는 순수 전기차 약 59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LG U+
매장AX솔루션
AI로 매장 관리부터 고객 홍보까지
고객 : 창가자리로 예약할 수 있을까요?
ixi : 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예약해드릴까요?
ixi 오늘 예약 20건,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U+서빙로봇
U+오더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대기번호를 알려드립니다.
U+키오스크
주문하기
U+포스
U+전화
STORE
BELLA ITALIA
ixi
AI RECOMMENDATIONS
VOICE RECOGNITION
AI고객센터
AI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제공
AI로 한 사장님의 성공을 돕는 회사가
금융 비즈니스의 혁신까지 이끌고 있다
AI기술의 성장을 모두의 성장으로
GROWTH LEADING
AX COMPANY

은행권, 인위적 대출금리 인상 '무용지물'…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

7월 5대 은행 주담대, 전월比 7.6조 증가… 8월도 '6조원' 넘게 불어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가산 금리 1.2%p로 상향
금융당국 '가계부채와 전쟁' 선포에도 널뛰는 주택수요 억제 역부족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 주택 관련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고자 시장금리 하락에도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한 가운데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다 '막차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7월 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59조7501억원이었다. 6월 말(552조1526억원) 대비 7조5975억원 증가했다. 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사실상 역대 최대치다.

8월에도 주담대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달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5조8957억원으로 7월 말(559조7501억원) 대비 6조1456억원 불었다. 월말까지 열흘이 남은 만큼 이러한 증가 속도가 유지될 경우 8월 주담대 증가 폭은 7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집값이 높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금액 자체가 불어났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8월 22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만3000건으로 작년 계약일 기준 전체 매매 거래 건수 13만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금리 시대였던 2021년 18만9000건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아파트 고액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22일 현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거래 비중은 각각 15.95%, 7.75%로 급증했다.

문제는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고자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채 은행권을 앞세워 가계부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13일부터 1년 7개월 넘게 유지됐다. 다음 금통위가 10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9개월간 동결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내수 진작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 동결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당정이 통화당국 결정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홍원학號 삼성생명, '시니어 브랜딩' 전략 정조준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의 시니어사업 강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시장 내에서 각종 상품 경쟁력 강화 작업과 시설운영 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시니어 전문 보험사라는 이미지를 다져가는 모양새다.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삼성생명

삼성생명, 치매·요양 등 시니어 관련 신상품 쏟아내
'업계 최초' 보장 강조… 삼성화재와 공동 브랜딩도
요양원 등 시설 운영 분야도 발 빠르게 태세 구축해
삼성화재 시절부터 입증한 투자능력도 실적에 한 몫

◇ "치매·요양 특화에 팔 걷었다"… 배타적 사용권도 공격적 선점

삼성생명은 지난달 경도인지장애나 최경증치매부터 치매의 모든 단계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삼성치매보험'을 출시했다. 주보험에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시 중증치매진단보장금을 주며 진단 확정 후 중증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일을 최초로 해 10년간 매년 해당일에 생존 시 중증치매 연금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이달 8일부터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도 출시해 판매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인 병원 입원과 가족돌봄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했다. 이로써 시설·재가·요양병원·가족돌봄까지 요양의 전 치료 여정을 보장하게 되며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을 제공하는 삼성생명만의 시니어케어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함께 요양보험을 동시 출시해 공동 브랜딩 시도에도 나섰다. 같은 날 삼성생명은 '삼성 함께가는 요양보험'을, 삼성화재는 '삼성 함께가는 요양건강보험' 판매를 개시했다. 생보·손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돌봄 영역이나 치매 담보 등을 강화해 기존 요양상품 대비 빠짐없는 보장을 강조해 시니어 시장을 본격 타깃했다.

배타적 사용권 확보를 통해 상품 경쟁력도 차별화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 보장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돌봄로봇을 제공함으로써 업계 최초로 경미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겠단 목적이다.

삼성생명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에 대비해 해당 상품을 개발했다는 설명이다. 치매는 근본적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해 병세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보험 미진입 영역인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치매 진단 시 보험금으로 돌봄로봇을 제공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돌봄로봇은 치매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정서관리 및 치매특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이 탑재된 기기다.

업계 최초로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치매 모든 단계를 보장하게 된 점도 특이점이다. 기존 경증이상 치매 보장에서 경도인지장애와 최경증(CDR 0.5) 이상 치매까지 보장 범위로 넓혔다.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돌봄 로봇 보급을 통해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진행속도 억제를 돕게 된다.

주력상품 중 하나인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에는 장기유지 고객이 노후에 필요한 보장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납입완료시점까지 유지 시 추가 보험료 납입없이 사망보장이나 시니어질병보장을 추가로 보장한다. 이는 업계 최초로 장기유지 고객에게 노후에 필요한 담보를 추가로 맞춤 보장하는 것이다. 나중에 건강상태가 바뀌어도 보장이 가능해 보험료 소멸부담을 줄였다.

삼성생명은 이들 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新) 건강 개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반고객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 태세를 갖췄다.

◇ 시설 운영 준비, 상품과 '투트랙'…자산운용성과도 호실적 견인

생보업권이 새로운 먹거리인 요양사업에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 등 시설 운영 분야에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부터 기획실 산하에 요양사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요양시설 설립과 관련한 시니어 보험상품,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준비해 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준비중인 요양시설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고급 시니어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와 비슷한 수준의 중상위층 고객을 타깃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KB라이프생명은 업계에서도 선제적으로 지난해 10월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빌리지', '서초빌리지'를 개소했고 2022년 첫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도 문을 열었다. 이외에도 NH농협생명과 신한라이프도 해당 사업에 뛰어들어 본격 추진을 준비 중이다. 신한라이프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요양시설 4곳과 실버타운 2곳을 설립하며 NH농협생명도 일본 디지털 요양사와 협업해 디지털 요양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홍원학 대표는 앞서 올해 초 생·손보 통합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혁신상품 출시를 통해 종신·건강보험 통합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연간 실적발표 후 올해 초 진행한 콘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생명이 해외 자산운용사 인수합병(M&A) 과 헬스케어·시니어리빙 등 성장성 높은 영역으로 신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CFO)은 "올해는 회계제도(IFRS 17) 도입 2년 차가 되는 해이기에 손익·확장·성장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손익 제고, 시장 지배력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는 보험사 수익구조에서 또 하나의 영역인 자산운용면에서도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순이익으로 전년동기 대비 40.5% 성장한 1조3685억원을 시현했다.

국내 빅3 생보사들 중 유일한 성장세 기록이다. 홍 대표는 앞서 삼성화재 수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자산운용부문 등 투자이익 성장을 통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한 성과가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출금리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 이복현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금융감독원장〉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 못마땅 부동산 상황 등 보며 적극적 개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상향은 금융당국의 지침과 무관하고, 그간 은행권 자율성 측면에서 당국이 개입을 최소화했지만 앞으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7월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상향하는 것에 대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보험사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해당 발언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담대를 중심으로 금리를 상향한 데 따른 경고성으로 읽힌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지난달부터 20차례 넘게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금리 조정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자 이 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이달 21일 개최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상향을 놓고 원론적인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쳤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한 타당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 이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현 조치) 인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서울, 수도권의 은행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기존 0.75%포인트(p)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어 당초 7월부터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로 높이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9월 1일로 미뤘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대출과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총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네카오, 성장성 적신호…"하반기도 주가 회복 난항"

네이버·카카오 올들어 각각 27.52%·35.32% 급락
신사업 등 성장성 부재에 광고·커머스도 성과 뚝
"주주환원 정책 등 시급"…증권사 목표가 일제히↓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신사업 등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대표 성장주로 2분기 실적 회복과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도 낙폭을 키웠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들어 각각 -27.52%, -35.32%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19% 오른 것과 대조된다. 시가총액 순위도 떨어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연초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각각 9위, 14위였다. 그러나 현재 기준 13위로, 23위로 밀려났다.

실제 네이버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7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해당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였다. 2분기 카카오의 영업이익도 18.5% 증가한 134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도 가시화되는 중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3일(현지시각)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감소했고, 이제 우리의 목표에 훨씬 가까워졌고,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9월부터 도입되는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 "10월 금통위 금리 인하 시작 후 내년도 분기당 한 차례 속도의 금리 변동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부정이다. 과거 성장성이 부각되던 시기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확보가 중요했지만, 최근 성장성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온 만큼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하단 것이다. 두 회사의 주력 사업인 광고나 커머스 등도 성장이 약해지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플랫폼의 실적 개선에 반해 콘텐츠의 부진이 나타난 점은 주력 사업의 성장성과 연결된다"며 "감익 사이클을 마무리한 점은 긍정적이나 장기 투자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해외·AI(인공지능)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내려잡았다. iM증권은 네이버의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22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신영증권(32만원→24만원)과 유안타증권(29만원→24만원), 삼성증권(25만원→24만원) 등 8곳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내렸다.

카카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8일 'SM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증권(5만1000원→4만2000원)과 대신증권(6만원→4만8000원), 미래에셋증권(7만원→5만원) 등 총 12곳의 증권사가 이달에만 카카오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삼성증권은 투자의견도 매수가 아닌 중립으로 변경했다.

오동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중장기 성장전략에 혁신성과 구체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글로벌 광고와 컨텐츠 시장에서 숏폼(짧은 길이 영상)과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보다 과감한 기존 서비스 개편과 신규 서비스 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책임경영' 김동선…한화갤러리아 주가 상승세 이끌까

주당 1600원에 3400만주 공개매수…기업가치 제고나서
유통주식수 60%→43%…금투업계 "중장기적 상승 견인"

한화갤러리아가 지난 23일 15% 이상 급등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회사 주식 3400만주를 공개매수하기로 밝히면서다. 이번 공개 매수로 주가와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는 23일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08원(15.96%) 상승한 1511원에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인 한화갤러리아우는 720원(29.88%) 상승한 3130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더 많이 오른 이유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보통주 3400만주를 주당 16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김 부사장은 이번 공개 매수를 위해 22일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 중인 한화 보통주 126만여주 등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에서 544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는 한화갤러리아가 올해 2분기 상장 후 첫 적자를 기록한 만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와 경영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화갤러리아의 2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263억원을 기록했으나, 4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

이번 김 부사장의 한화갤러리아 주식 매입 가격은 한화갤러리아의 1개월 종가 평균 1190원 대비 약 34%, 22일 종가인 1303원 대비 약 23% 할증된 가격이다. 한화갤러리아 측은 최근 3년 내 공개매수 사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이라고 알려졌다.

김 부사장이 공개 매수로 사들이는 주식 3400만주는 전체 보통주의 17.5% 수준이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김 부사장이 보유한 한화갤러리아 지분은 현재 2.3%에서 19.8%로 늘어난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에서 인적 분할돼 신규 상장된 이후인 작년 4월 12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총 449만9860주를 총 56억원을 들여 회사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현재 기준 한화갤러리아의 1대 주주는 지분 36.31%를 보유하고 있는 한화다. 2대주주는 김 부사장, 3대주주는 한화솔루션(1.39%)으로 구성돼 있다.

시장에서는 김 부사장의 주식을 매수 소식에 주가 또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란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한화갤러리아 지분이 60%에서 42.5%로 줄어드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에겐 긍정적인 효과다.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에게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매수 참여 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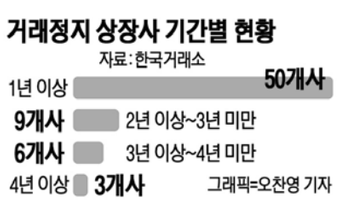
이번 공개매수는 한화갤러리아 소액주주(올해 6월 말 기준 58.27%) 3분의 1(공개매수 목표치인 17.5%)만 응모해도 성공하게 된다. 올해 4월 공개매수를 진행했던 현대홈쇼핑도 공개매수 지분(25%) 대비 1.8배 수준의 소액주주들이 응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들어 한화갤러리아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 입장에서 공개매수 시 최대 6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함께 책임 경영 의지를 표한 점도 적자로 불안했던 주주들을 안정시키고, 밸류업 기대감도 커질 수 있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하늘 기자

'거래정지' 100개 종목에 10조원 묶여…개미들 '발 동동'

상장폐지 심사 '최장 4년'
1년 이상 정지 50곳 달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 지적
거래소 "연내 대책 마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상태인 상장사가 총 1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만 절반인 50곳으로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거래정지 상태의 상장사는 코스닥 기업이 74개, 코스피 21개사, 코넥스 5개사 등 총 100곳이다. 이들 기업의 시총을 모두 더하면 10조8549억원 규모다.

이들 기업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은 438일로 1년 이상 거래정지된 상장사만 총 50개사다.

이큐셀,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성코퍼레이션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600일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4년 넘게 자금이 묶인 셈이다.

거래정지 기간별로는 △4년 이상 거래정지 3개사 △3년 이상~4년 미만 6개사 △2년 이상~3년 미만 9개사 △1년 이상~2년 미만 32개사 △1년 미만 50개사 등이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자본잠식, 매출액 미달,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에 증시 퇴출 전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2심제(기업심사위원회·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 시장에선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의 경우 최장 4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장기간 심사를 거쳐도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다. 또 상장폐지 결정 이후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는데 보유한 주식 가치가 떨어져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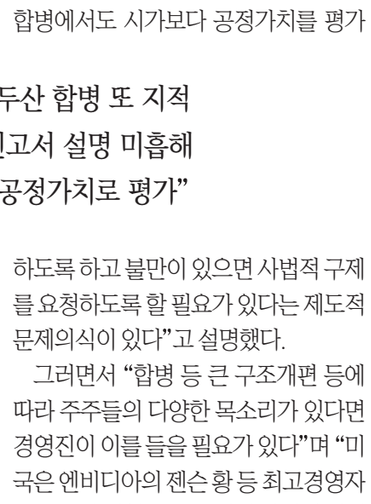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증시 활력 저해와 투자자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자금이 오래 묶여 있다", "거래재개든 상장폐지든 차라리 빨리 결정이 나서 종목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의 경우 현재 3심제에서 2심제로 상장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거래소는 현재 개선 기간 단축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연내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現증권신고서, 투자자 이해하기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두산이 추진 중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에 대해 "지금의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산이 금감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불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두산그룹의 정정보고서에 추가 정정 요구를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원장은 25일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기업의 구조개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이에 금감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면서도 "다만 투자자들이 이번 합병의 실질적 목적이 무엇인지, 합병이 어떤 의사결정을 거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 과정에서 캐시플로우(현금)를 보유한 밥캣의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재무적 위험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현재 제출된 증권신고서로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 두산 합병 또 지적
"재무적 위험 등 신고서 설명 미흡해
해외선 시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

앞서 두산은 그룹의 '알짜' 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기업가치를 각각 5조700억원, 5조1900억원으로 추산했고 합병비율은 1대 0.63주로 산정했다.

이에 두산밥캣 투자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두산밥캣은 지난해 1조3899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반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기업가치를 비슷하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두산밥캣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두산그룹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추가로 두산그룹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두산그룹은 사업구조 개편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 원장은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합병비율 가치가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시가를 정하게 했다"며 "하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법이고 면죄부를 주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룹 계열사 합병에서도 시가보다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 등 큰 구조개편 등에 따라 주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면 경영진이 이를 들을 필요가 있다"며 "미국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최고경영자(CEO)가 기업 목표를 직접 나서서 설명하는데 두산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향후 목표를 직접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했는지를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비판적 의견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원칙에 이견이 없으나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취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과세철학적 문제가 있다"며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고정적인 이자에서 오는 수익과 비교했을 때 위험을 감수한 이득에 대해 더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PGM·C4I '잭팟'…LIG넥스원, 실적 고공행진

〈정밀유도무기〉 〈지휘통제통신〉

LIG넥스원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M-SAM) 천궁-Ⅱ를 비롯한 대규모 수출이 이뤄진 덕분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9년 각각 1조4527억원·181억원에서 지난해 2조3086억원·1864억원으로 높아졌다. 올해는 매출 3조원과 영업이익 2400억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밀유도무기(PGM)와 지휘통제통신(C4I) 사업이 실적을 이끌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PGM 부문 매출은 4955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지난해에 비하면 비중이 낮아졌으나, 천궁-Ⅱ 추가 수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라크에 8개 포대가 수출되면 계약 규모는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우디와 루마니아도 수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사우디는 앞서 천궁-Ⅱ를 도입했으나, 역내 분쟁이 지속되고 주변국 보다 대공방어가 필요한 영역이 넓다.

안유동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천궁-Ⅱ는 고부가 무기체계로 요격 미사일은 1발당 가격이 15~1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장기적으로도 중동에 깔려있는 미국 사드를 대체하는 등 수주 및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매출 3조원·영업익 2400억원 전망…PGM 매출 전체 36.2%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궁',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
위성·레이저 체계조립동 구축에 유도무기 생산기지도 확보

2.75인치 지대함 유도로켓 비궁의 경우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지난달 미국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열린 환태평양 훈련(림팩) 기간 중 최종 시험발사에서 6발 모두 명중하는 등 5년에 걸쳐 진행된 해외비교시험(FCT)에서 성과도 냈다.

이는 미 국방부(DoD)가 동맹국 방산기업의 기술을 평가해 자국군이 추진 중인 개발·획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비궁은 해안으로 고속 상륙하는 적 공기부양정을 정밀타격하는 무기체계로 다수의 유도로켓을 탑재해 다표적에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가형 유도로켓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성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LIG넥스원은 중동 지역에서도 수출을 타진 중이다.

C4I 부문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7.9%에서 지난해 20%를 돌파하고 올 상반기는 34.3%로 높아졌다.

여기에는 △군 위성통신체계-Ⅱ △지능형 전장 상황인지 통합플랫폼 △기동형·다기능 통합통신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군 위성통신체계-Ⅱ는 군 위성을 이용해 지역의 제약 없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 가능한 위성통신단말이다.

미국 4족보행 전문업체 로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고 미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고스트로보틱스의 '비전60'은 경쟁사 대비 배터리 지속시간이 길고 물과 자갈탑 등 다양한 지형에서 움직일 수 있다. 임무 유형별로 최적화된 장비를 탑재하고 신속한 수리가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LIG넥스원은 성남 지역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에 총 3697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미래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천에서 493억원을 들여 위성·레이저 체계조립동도 구축하고 있다. 기술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관련사업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유도무기 체계개발 및 연구·생산기지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에서도 LG전자 A2공장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미래사업에 대비한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고 생산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총 4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확장·고부가 무기체계 개발·미래전장용 제품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LIG넥스원은 무인수상정(USV) 해검-Ⅱ를 비롯한 무인무기체계 라인업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인재 채용 돌입

삼성전자,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6개 대학서 '테크&커리어 포럼' 개최
SK하이닉스도 '테크 데이' 열어…美 인턴십 등 해외 인재 확보 총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반도체 인재 확보전에 뛰어든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하반기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등 직무별 채용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중 내년 2월 졸업 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경력 2~4년차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탤런트' 전형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하반기 전임직(생산직) 직원 채용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반기를 통틀어 올 한해에만 세 자릿수 규모의 생산직 인력을 뽑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사가 반도체 인재 확보에 나선 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개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 제품 개발 등 차세대 메모리 관련 인재를 채용한 바 있다.

경영진도 반도체 인재 확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연세대와 서울대를 시작으로 포항공대(2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27일), 성균관대(28일), 고려대(29일) 등 6개 대학에서 '테크&커리어(T&C) 포럼'을 연다.

T&C 포럼은 지난 2016년부터 DS 부문이 반도체 인재 발굴과 양성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석·박사 대상 행사다.

올해 T&C 포럼에는 DS 부문 기술 담당 임원들이 나서 회사의 문화와 주요 제품·기술 등을 설명한다.

SK하이닉스도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대, 포항공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에서 석·박사 대상 채용 행사인 '테크 데이 2024'를 개최한다.

테크 데이에는 김주선 AI 인프라 담당 사장을 비롯해 김종환 D램 개발 담당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해외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신공장 설립을 앞두고 주변 대학과 협력을 추진 중이다. 인재 확보를 위한 포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미국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마련될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에서 일할 인력 채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삼성전기, 新 먹거리 'FC-BGA' 앞세워 글로벌 고객 확보 나선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삼성전기가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를 새 먹거리로 낙점한 모습이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반도체 기판도 활황인 영향이다.

회사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2일 제품 학습회를 열고 자사 FC-BGA와 시장 상황 및 해당 제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반도체 기판 중 하나인 FC-BGA는 고집적 반도체 칩과 기판을 플립칩 범프로 연결하며 전기 및 열적 특성을 높인 패키지 기판이다. PC, 서버,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자동차용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 처리 장치(GPU)에 사용된다.

특히 AI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FC-BGA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FC-BGA 시장 전망은 밝다. 후지카메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0억달러(약 11조원) 수준이던 글로벌 FC-BGA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 164억달러(약 22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AI 열풍에 반도체 기판 시장 호황
FC-BGA, 전기·열적 특성 높여
AMD와 손잡고 제품 양산 돌입
"세계 최고 미세 가공 기술 보유"

삼성전기가 미래 먹거리로 FC-BGA를 낙점한 이유다. 앞서 회사는 지난달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와 고성능 컴퓨팅(HPC) 서버용 FC-BGA 공급 계약을 맺고 제품 양산을 시작하며 FC-BGA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세계적으로 FC-BGA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10곳 미만이다. 현재 일본과 대만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앞세워 수요 공략에 나선다는 포부다.

황치원 삼성전기 패키지개발팀 상무는 지난 22일 열린 제품 학습회에서 "삼성전기는 (FC-BGA 시장에서) 어느 업체보다 뒤지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밝혔다.



황치원 삼성전기 패키지개발팀 상무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소개하고 있다.

반도체 기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은 '미세 가공 기술'과 '미세 회로 구현'이다. 삼성전기에 따르면 회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가공·미세 회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1조원 이상 투자해 베트남 신공장을 첨단 하이엔드 제품 양산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를 통한 성과도 눈에 띈다. 삼성전기는 올 2분기 패키지솔루션(첨단 패키지 기판) 부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49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측은 베트남 신공장에서 생산된 FC-BGA 등의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향후 서버·자율주행·네트워크 등 고부가 FC-BGA 제품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성능 서버 및 네트워크, 자율주행 등 하이엔드 반도체 기판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고부가 FC-BGA 제품 비중을 50%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LG전자, 5G 특화망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

업계 최초 획득…사업 본격화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5G 특화망 솔루션이 최근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로부터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을 5G 특화망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25일 LG전자에 따르면 '국산 네트워크 장비 인증'은 국내에서의 개발·생산 여부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으로 공공기관에 제품 공급시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으로 LG전자는 5G 특화망 관련 핵심 기술력 내재화를 공인 받았다.

5G 특화망은 공장, 빌딩 등 특정 공간에 제공하는 맞춤형 5G 네트워크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뛰어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DX/AX) △스마트팩토리 운영 등 산업 혁신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꼽힌다.

이번에 인증 받은 LG전자 5G 특화망 솔루션은 기지국 장치(RAN), 5G 코어(5G CORE) 등 기존 5G 통신 장비가 담당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하드웨어(HW)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통해 데이터 처리 속도나 안정성 등을 개선할 수 있어 운영비용이 절감된다.


LG전자가 5G 특화망 솔루션을 시험 운영한 바 있는 美 테네시 공장 전경

또한 다양한 고객 니즈와 설치환경에 최적화한 맞춤 5G 특화망 경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안이 중요한 고객을 위해 외부 접속을 차단하는 전용 네트워크를, 다른 기업과 협업이 많은 고객을 위해 외부 클라우드와 연결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각각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구축에 그치지 않고, 로봇·사이니지 등 LG전자 제품은 물론 고객이 보유한 CCTV·스마트 안전장비 등을 5G 특화망으로 연결해 통합 관리하도록 디바이스 제어 솔루션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이번 국산 인증을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을 원하는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의 5G 특화망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윤호 기자

HMM, 자원순환·친환경 연료 도입 등 ESG 역량↑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
사업장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에코바디스 ESG 평가 '플래티넘'

HMM이 자원순환·탄소저감 등으로 ESG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화주들의 니즈에 대응하는 등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지난 22일 E-순환거버넌스와 'E-Wate Zero'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두비움, ESG 나눔' 자원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HMM은 폐전자제품 1000여대를 기증했고, 향후 사무실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연료 도입과 운항기술 고도화 등 기존 스코프 1·2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이어 스코프3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밸류체인 전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적인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배출도 포함된다.

E-순환거버넌스는 기업·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제조합이다. 참여기업에는 스코프3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등을 발급한다.

HMM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친환경 철도물류 활성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탄소저감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양사는 코레일의 냉동컨테이너 철도수송 서비스 운영에 협력하고, 서해선 송산컨테이너야드(CY)를 서북부 내륙운송 허브기지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HMM은 국내 내륙물류 철도운송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특히 선박-철도간 화물수송이 바로 연결되는 '인터모달' 원스톱 운송체계가 철도수송 분담률을 늘리고 저탄소 물류 교통체계 확대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에코바디스 ESG 평가에서 '플래티넘' 등급도 받았다. 2021년 '실버', 2022~2023년 '골드'에서 올라선 것이다.


지난 7월25일 서울 여의도 HMM 본사에서 진행된 '친환경 철도물류 활성화 업무협약(MOU)'에서 이정엽 컨테이너사업부문장(오른쪽)과 김양숙 코레일 물류사업본부장이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코바디스는 프랑스 소재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조달 항목을 평가한 뒤 플래티넘(상위 1%), 골드(5%), 실버(15%), 브론즈(35%) 등급을 부여한다.

HMM은 환경 뿐 아니라 지속가능조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N, 美 '올해의 전기차'

'카앤드라이버' 선정…3년 연속 영예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N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가 발표한 '2024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는 3년 연속 카앤드라이버의 올해의 전기차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카앤드라이버는 18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의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고 이중 아이오닉 5 N는 17개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뽑혔다.

K.C. 콜웰 카앤드라이버 편집장은 "현대차가 올해의 전기차 3연패를 차지하며 아이오닉을 새로운 왕조의 일원으로 합류시켰다"며 "아이오닉 5 N은 마치 80년대의 G-모델 포르쉐 911 클럽 스포트가 선사했던 진정한 매니아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전기차"라고 말했다.



현대차 아이오닉 5 N

현대차 관계자는 "N e-시프트, N 그린 부스트와 같이 고성능 전기차 특화 기능을 선보이며 전기차 운전의 즐거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아이오닉 5 N이 카앤드라이브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게임업계 고질병 '확률형 아이템 이슈', 국감 쟁점으로

'법안 시행 사후관리' 다룰지 주목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됐지만
규제 대상 범위 등 가이드라인 모호
거짓확률 표시 등 위반 사례 단속 난항
해외 게임사 제재 미흡…역차별 논란
넥슨 등 게임사, 국감 소환 가능성도
입조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강조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본부장(왼쪽부터), 김규철 게임위원장, 박우석 게임위 팀장이 지난 7월 열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꼽혀 오던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올해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다뤄왔던 것과 달리 올해는 관련 법안의 한계와 시행 이후 사후관리 현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게임업계 주요 쟁점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꼽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BM)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이용자들의 과도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이후 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 이에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제공 기간·표시 방법 등을 게임물과 홈페이지에 의무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 기준이 모호해 규제 대상의 범위와 광고물 범주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적잖다. 이 때문에 확률정보 미표시·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소관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사의 거짓 확률 표시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및 게임위의 조사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거짓 확률 표시 검증에 일부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과 중복돼 이중 규제가 이뤄진다는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양 기관은 적용 법률과 수행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할 경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게임위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55건의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26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60%는 해외 게임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입법이 수차례 좌초돼 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해당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오는 2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대에 올라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증인 채택이 이뤄진다면 정보공개 의무화 전후로 확률 조작 논란에 휩쓸렸던 게임사들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 시행 이후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기업은 위메이드, 그라비티, 웹젠, 크래프톤, 컴투스 등 5곳이다. 이들은 기존 확률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넥슨코리아도 국감 증인 소환 물망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 초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도 이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넥슨 캐시로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할 경우 그 규모는 약 2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입조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게임위의 조사 권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논란을 막기 위해선 게임위가 거짓 확률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조처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앞서 게임위가 거짓 확률에 대한 사실 유무를 살펴보는 선행조사를 실시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며 "게임위 선행조사 결과 사업자의 거짓 확률 표시가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 공정위에서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딥러닝 신기술 총집합…캐논, 韓 시장 공략 나섰다

신작 EOS R1·R5 Mark Ⅱ 공개…높은 성능으로 전문 사진·영상서 적격
CMOS 센서 탑재…'액션 우선' '등록인물 우선' '시선 제어' 기능 등 실현



키요미 테츠지 캐논 이미징 사업본부 부본부장이 자사 첫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EOS R1과 EOS R5 Mark Ⅱ를 선보이고 있다.

일본 광학 기업 캐논이 자사 첫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 EOS R1과 EOS R5 Mark Ⅱ를 출시하며 본격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25일 캐논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EOS R1과 EOS R5 Mark Ⅱ를 지난 23일 국내 최초 공개했다.

EOS R1은 캐논의 첫 플래그십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높은 사진·영상 촬영 성능을 바탕으로 스포츠·뉴스 보도·영상 제작 등 폭넓은 전문 사진·영상 분야에 적합한 제품이다.

이는 캐논이 자체 개발한 약 2420만 화소의 이면 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했고 액셀러레이티드 캡쳐 시스템 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해석해 고속 연속 촬영·고속 AF 처리·롤링 셔터 왜곡의 저감을 실현했다.

블랙 아웃 없이 초당 약 40매의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하며, 듀얼 픽셀 CMOS AF 최초로 크로스 타입 AF를 지원해 피사체 식별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초점을 맞추기 어려웠던 피사체도 정확하게 포착한다.

또한 영상 촬영 부문에서 성능 강화를 통해 최대 6K 60p RAW 영상 촬영·시네마 EOS 시리즈와 호환 작업이 가능하다.

EOS R5 Mark Ⅱ는 하이 아마추어부터 프로페셔널 사진 작가까지 폭넓은 유저층을 아우르는 고성능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다. 약 4500만 화소의 이면 조사 적층형 풀프레임 CMOS 센서를 탑재하고, EOS R1과 동일하게 액셀러레이티드 캡쳐 시스템·딥러닝 기술이 적용됐다.

AF 기술 역시 업그레이드돼 딥러닝 기술로 스포츠 동작을 감지하는 '액션 우선 AF', 최대 100명까지 가능한 '등록 인물 우선', 뷰파인더를 보는 눈동자 움직임을 감지해 AF를 조작하는 '시선 제어' 기능 등이 탑재됐다.

전자식 셔터로 최대 약 30매의 고속 연속 촬영이 가능하며 최대 약 1억7900만화소까지 업스케일링을 지원한다. FHD 30p 영상 녹화 도중에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쿨링 팬 액세서리 'CF-R20EP'도 함께 출시해 장시간 영상 녹화가 필요한 촬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

한편 EOS R5 Mark ll는 오는 9월 4일 바디 549만9000원, 24-105 F4 키트는 682만8000원에 정식 판매를 앞두고 있다. EOS R1은 오는 11월경 800만원대로 출시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네시스·현대차, 美 J.D. 파워 선정 기술 만족도 1위

제네시스와 현대자동차가 J.D.파워 선정 신차 첨단 기술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석권했다.

현대차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J.D.파워의 '미국 기술 경험 지수 조사(TXI)'에서 제네시스(584점)가 렉서스(535점), BMW(528점) 등 유수의 완성차 브랜드를 제치고 전체 브랜드 1위, 현대차(518점)가 일반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TXI 조사는 2024년형 신형 모델을 구입하고 90일 이상 소유한 8만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됐다.

이 조사는 자동차에 탑재된 △편의성 △최신 자동화 기술 △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인포테인먼트 및 커넥티비티 등 4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된 40개 기술에 대한 만족도를 1000점 척도로 묻는 고객 설문을 통해 각 브랜드의 신기술 혁신 수준과 사용 편의성을 평가한다.

특히 TXI 조사는 J.D.파워의 주요 조사로 꼽히는 신차품질조사(IQS)와 상품성 만족도 조사(APEAL)의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시스는 이번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 품질을 갖춘 브랜드로 평가됐다.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를 통틀어 최고 점수인 584점을 획득 4년 연속 전체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의 584점은 럭셔리 브랜드의 TXI 점수 평균인 477점보다 107점가량 상회하는 점수다.

현대차는 518점을 받아 일반 브랜드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일반 브랜드 평균 TXI 점수는 431점으로 현대차 역시 87점가량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도 499점으로 일반 브랜드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해 높은 기술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원전이냐, 재생e냐 싸움… 시민들 요구 귀 기울이면 답 나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세번째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비례대표 아닌 지역구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

“기후는 곧 경제… RE100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CF100 원전산업 부흥 정책, 전 세계 흐름 맞춰 재생에너지로 가야 의정부 미군 반환 부지서 미래에너지 육성 클러스터 조성 추진할 것”

■ 박지혜 의원 프로필

◇약력 △1978년 경기 연천군 출신 △2001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경영학 졸업 △2003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과정 수료 △2004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 석사 △2017년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2017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2019년 기후솔루션 이사 △2021년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전공 박사 △2022년 플랜 1.5 공동대표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

“여당과 야당의 기후에너지 분야서 정치 갈등은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는 싸움이다. 원전은 주민반발을 고려하면 기후대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갑)은 지난 19일 당선 100여 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의 여야 간 간극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민 반발을 고려할 때, 원전은 기껏해야 지금보다 한기 혹은 두기 더 건설할 수 있다며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현 정부의 원전을 중심으로 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아닌 원전산업 부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대신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탈석탄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며 지난 2016년 국내 대표적인 기후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을 만든 창립멤버다. 기후솔루션 창립 6년 후인 2022년 플랜1.5라는 씽크탱크 형태의 단체를 또 만들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환경단체의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이슈를 주도하는 단체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 1호로 정치에 뛰어들었고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에 진입했던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지역구(의정부갑)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기후에너지 이슈가 지역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에 위치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등을 짓겠다며 기후 전문 의원으로서의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여전히 배울 게 많다. 기후·환경 전문가로 등원했기에 소명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현안 대응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 중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기후행동모임 비상 등 기후정치 관련 활동은 물론,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중산층 정책연구회·을지로위원회·개혁행동포럼·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포럼 및 연구단체 활동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가는 중이다.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잘 다져야 기후정치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을 거부하고 있는 등 정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갈등을 체감하고 있는가.

▲ 엄청 체감하고 있다.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면 뭘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든다. 채상병 특검법도 벌써 두 번째 거부다.

당원들과 소통해보면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많은 시민들도 답답해 한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이 있어야 시민들이 납득을 할 거 같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주요 법안들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 기후솔루션 창립 멤버로 알고 있는데 플랜 1.5를 또 만든 계기가 궁금하다.

▲ 단체가 커지나 보니까 조직 운영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단체를 만들어서 이슈 중심으로 활동하고자 플랜 1.5도를 만들었다.

- 기후에너지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인가.

▲ 기후 위기 대응은 오늘날 모든 정당에서 주목하는 의제로 떠올랐다.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RE100은 국내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의제다.

기후는 경제다. 탄소중립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

-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 다만, 기후특위 역할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어 보인다.

▲ 21대 국회처럼 기후특위가 ‘맹탕 특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기후특위 상설화와 일정한 권한 부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지난 9일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은 기후특위를 상설화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제법 등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 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국민의힘 안도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 기후에너지부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보통 환경부가 기후·환경 문제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끌어갈 힘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통상 등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음에도 책임이 없어 방어적 태도만 보인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기후·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제까지도 반영돼야 한다. 이에 정책을 통합하고 강하게 추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수다.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및 산업·통상의 일부 기능뿐 아니라 기획재정재부의 기후 예산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 산자위에서 준비 중인 법안이 무엇인가.

▲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산단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방자치단체 규제인 이격거리 규제가 꼽힌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내 의원들도 이격거리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이 발의돼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은 주민 주거 및 자연보호 등 이격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로 합리적인 기준을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주당 당론 채택에서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밀리지 않았나.

▲ 실제로 당론으로 발의하려고 했다. 21대 국회 때 추진했던 것들 중에 정책위원회가 지정한 법안들이 당론으로 의원총회에 올라왔었다.

그런데 이격거리를 10m까지는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올라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론 채택은 이래서 안 하기로 했다. 대신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안 발의를 한 상태다.

아마 산자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격거리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해상풍력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 해상풍력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 입지선정이 어렵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다. 게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인 해상풍력 추진하도록 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제정법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풍력발전추진단 설치도 담고 있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서 2031년에 전력계통 여유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데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정점 시기는 2018년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탄소배출 정점 시기가 늦다. 탄소중립 달성 기한이 상대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의 2030년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 국가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 일본 38%에 달한다.

더욱이 건설 기간이 긴 원자력발전과 실증도 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했다. 전 세계 전력 수급 흐름은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기반한 원전·석탄 발전을 계획하는 구시대적인 전기본 수립 방식은 급변하는 전력수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에 적합하지 않다. 학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기본 수립 과정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탈석탄을 무리하게 하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우려도 제기된다.

▲ 석탄 발전사업자들의 정당성이 너무 약하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석탄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으로까지 이의제기 하긴 어렵다. 당장 출력제어도 소송 못하고 있다. 계통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탈석탄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들 일자리 정책과 충남, 경남 일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서 가야 한다.

- 여당은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야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간극을 좁힐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좁혀가야 한다. 어쨌든 무탄소라는 점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싸움이다. 하지만 원전은 한 두개를 더 지을까말까 하다. SMR은 불확실성이 크다.

원전은 주민수용성 고려와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후대응을 위해 맞는 정책 수단이겠는가. 원전을 주장하는 건 원전산업 부흥을 위한 정책이지 기후대응을 위한 게 아니다.

큰 대세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정부와 여당에서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

-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기한 기후소송에 참여한 걸로 안다. 기후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 (위헌이라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합헌이 나오더라도 정부가 이런 점에서 잘못 대응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시되면 기후대응 정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홀하다는 뜻인지.

▲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제시했는데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을 핑계로 삼는 모습이다.

- 플랜1.5는 탄소배출권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단체였다. 배출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온다.

▲ 국내 배출권 시장의 제도는 글로벌 트렌드에 벗어나 있다. 시장 내 과잉 잉여분으로 인해 배출권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해외 시장 대비 낮은 가격이 거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 자체도 불확실하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유독 낮은 이유는 느슨한 배출권 정책 탓이다.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 기후에너지 분야가 꼭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 기후환경 이슈는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기후경제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역 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의 경제성장과 그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의정부에도 미래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만한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가 있다. CRC를 디자인산업·미래에너지·역사관광·복합문화쇼핑 클러스터 조성 발판을 마련 할 것이다. CRC 부지에 미래에너지 연구시설 및 관련 스타트업 밸리 구축 지원과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희·윤수현 기자 wonhee4544@ekn.kr

유한양행 렉라자 美승인에 삼바·셀트리온 소환 까닭은

FDA 품목승인 국산 항암제 1호 간담회
"올해 2500억 투자…렉라자 후속제품 계획
대기업식 개발-승인-상용화 독자수행 기대"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존슨앤드존슨(J&J) 자회사 얀센에 기술수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받음에 따라 제2, 제3의 렉라자 배출을 위한 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동시에 유한양행은 이번 렉라자 FDA 승인이 렉라자를 기술이전 받은 J&J의 주도로 이뤄졌던 만큼 향후에는 우리 제약사들도 독자적으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허가, 출시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25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렉라자의 FDA 승인 이후 유한양행의 신약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유한양행은 지난 2015년 국내 바이오기업 오스코텍으로부터 후보물질 단계의 렉라자를 도입한 이후 물질최적화, 공정개발, 전임상, 임상 개발을 거쳐 2018년 얀센에 렉라자를 기술수출했다.

이후 얀센은 자체 보유한 항암제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와 렉라자를 병용하면 치료효과가 더 우수할 것이라고 판단,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해 임상을 진행해 지난 19일 이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렉라자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첫 국산 항암제의 명예를 얻게 됐다. 또한 유한양행은 1조원 이상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비롯해 향후 J&J가 출시해 판매하면 지속적인 로열티(매출의 일정금액)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다.

유한양행은 이번 렉라자 FDA 승인을 계기로 △현재 임상 1·2상 진행 중인 이중항체 항암제 'YH32367' △임상 1상 중인 알레르기·천식 치료제 'YH35324' △최근 임상시험을 시작한 희귀유전질환 '고셔병' 치료제 'YH35995' 등을 제2, 제3의 렉라자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기술수출, 전략적 투자, 대학·연구소 기초연구지원 프로젝트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YIP)' 등을 통해 △항암 △대사질환 △면역질환 등 3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블록버스터 신약을 배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열홍 유한양행 R&D총괄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다수 만드는 것"이라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안정적인 신약개발 투자재원이자 기업 경영자금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의 생명을 유의미하게 연장해 주는 등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우리 제약사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등 대기업처럼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해 FDA 승인과 상용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코로나 치료제, 품귀·수입의존 언제까지?

화이자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 26만명분 도입 계획
10월부터 새 변이 대응 백신도 도입해 접종할 방침
국산 백신·치료제 생산중단…정부지원 '공염불' 지적도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왼쪽 1번째)이 22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점검을 위해 한 약국을 방문하고 약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달 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해 보건당국이 백신·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유행 때와 똑같이 외국산 백신·치료제에 의존하는 모습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응마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치료제 17만7000명분을 전국 약국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총 26만2000명분을 순차 도입해 이달 중으로 치료제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며 재유행 양상을 보였으나 8월 3째주에는 전주 대비 증가율이 5%대로 떨어져 이달 말을 정점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품귀현상을 빚었던 코로나19 치료제 수급불안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백신의 경우 질병청은 최신 변이인 'JN.1'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도입해 국내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름철 재유행에 대응한 정부의 백신·치료제 수급 계획은 모두 해외 제품 도입이라는 점에서 지난 2020~2021년 팬데믹 때와 판박이다.

이번 여름철 재유행에 도입되는 치료제는 경구용(먹는) 제형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미국 머크(MSD)의 '라게브리오'이다.

백신의 경우 지난 22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주사제형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개발해 국내 승인을 받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2년 국산 코로나19 백신 1호 '스카이코비원'의 국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오미크론 등 변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2022년 렉키로나와 스카이코비원 모두 각각 생산이 중단됐다.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가 심사 중이다.

조코바는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품목허가 신청 이후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 830억원(임상시험 767억원, 비임상시험 63억원)이 지원됐지만 개발에 성공한 과제는 한 건도 없었다.

업계는 정부가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신종감염병 백신 개발에 10년간 총 2150억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감염병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의지를 강조해 왔지만 정작 국내 첫 코로나 백신·치료제를 개발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은 대부분 자체 비용으로 개발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획〕 K-스타트업의 도약

99 '숏폼' 1400만뷰 달성 숏만연구소

1분 안팎 상품홍보 영상 제작 '숏폼' 선두주자

크리에이터 군단 양성 다수 노출 대세감
농심·대상 등 대기업과 협업… 中진출 앞둬


숏만연구소의 첫 숏폼이자 1400만 조회수를 달성한 로보티즈의 반려로봇 홍보 숏폼 이미지.

3~4년 전만 해도 틱톡·유튜브 숏츠 등에서 제공하는 15초~1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 '숏폼'을 커머스 비즈니스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는 SSG닷컴·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에서도 숏폼 서비스가 대세를 차지할 정도로 유통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숏만연구소는 국내 숏폼 커머스시장 개척에 나선 선두 스타트업으로, 1400만회 조회된 첫 숏폼을 시작으로 약 3년 전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숏폼 활용 강연을 벌이며 숏폼 비즈니스에 '진심'인 창업기업이다. 덕분에 농심·유한킴벌리 등 다수의 대·중견기업들과 협업해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윤승진 숏만연구소 대표는 "중국 비즈니스 학습 여행 전문 여행사 만나통신사를 운영하다 코로나19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업에 뛰어들려던 차, 중국 시장에서 접한 숏폼이 메가 트렌드가 되겠다는 강한 확신을 가져 숏폼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사업 계기를 밝혔다.

현재 숏만연구소는 한 명의 메가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광고하는 MCN 방식을 대체하는 KOC 방법으로 △숏폼 제작 △숏폼 계정 운영 대행 △숏폼 계정 신규 생성 세 가지 전략으로 숏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KOC는 크리에이터 군단을 양성해 실질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재 크리에이터 집단은 유아·식품·뷰티 등 각 카테고리별로 약 500명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메가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1회당 약 10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러나 틱톡, 유튜브 숏츠 등 숏폼 노출 알고리즘은 팔로우 기반이 아닌 콘텐츠 기반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크리에이터 집단이 생성한 각기 다른 콘텐츠를 다양하게 배급할 경우 콘텐츠가 주목받을 확률이 높은데다 다수 노출로 대세감이 만들어져 구매로 이어지는 효과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유저 반응에 따라 성공할 때까지 콘셉트를 변경하는 것도 숏만연구소의 특징이다.

현재 숏만연구소는 협업하는 기업들과 함께 숏폼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작자에게 틱톡 등 글로벌 시장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성공하는 콘텐츠의 특징과 영상 문법 등의 노하우를 알려주며 1대1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윤 대표는 "숏만연구소가 보유한 숏폼 제작 노하우 예시로 영상 첫 시작 부분인 1초에 사람의 시선을 끌어잡는 방식이나 사운드 활용, 시선 끄는 요소 배치, 자막과 제목, 캡션 활용 등의 알고리즘 로직이 있다"며 "이를 경험적으로 체계화해 영상 제작 시 필수 요소들을 재조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숏만연구소는 △농심 △세븐일레븐 △유한킴벌리 △쿠첸 등 다수의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숏만연구소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중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 출신인 로우 윈 주엔 공동창업자와 함께 중국 항저우에 현지 크리에이터 군단을 양성하고 있다. 향후에는 미국과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숏만연구소는 숏폼 제작 비결에 힘입어 △농심 △세븐일레븐 △유한킴벌리 △쿠첸 등 다수의 대·중견기업과 협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 매출(5억원) 대비 가파르게 상승한 약 20억원의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투시도.



한화 건설부문이 만들고 있는 '서울아레나' 조감도

HDC현산·한화 '원가율 개선' 속도

재무건전성 '우수' 우발 채무 제한적…'수익성 개선' 시동

10대 건설사 상반기 경영실적 ⑤끝

HDC현대산업개발과 한화 건설부문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HDC현산이 악재를 이겨낸 후 본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한화는 별다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사 모두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 재무 건전성 끌어올린 HDC현산, 기술력으로 더 큰 도약 채비

"자세히 볼수록 좋다." iM증권이 최근 HDC현산 관련 보고서를 내며 뽑은 제목이다. 이 회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시도, 아파트 붕괴 사건 등 각종 악재를 딛고 발 빠르게 본업에 집중한 만큼 향후 원가율 개선 속도는 경쟁사 대비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

HDC현산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조4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다. 같은 시기 영업이익은 954억원으로 71% 불었다. 원가 상승 등 문제를 잘 해결하며 4.9%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146.3% 수준이다.

수익성을 개선하며 몸집도 잘 불리고 있다는 평가다. HDC현산은 상반기 1조6944억원 규모 일감을 새로 따냈다. 작년 상반기(3106억원)과 비교해 5배 이상 커진 양이다.

시장에서는 HDC현산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발판으로 내년부터 본격 실적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돼 있다. 앞서 2573억원 규모 대전 가양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을 따내기도 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HDC현산은 최근 서울 용산구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냉방용품과 식료품을 용산복지재단에 기부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는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HDC와 함께 1억원을 마련해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재활 교육용 키오스크를 쾌척했다. 입주 고객 서비스인 '아이파크 홈커밍데이' 대상을 기존 준공 1년차 단지에서 4년차 단지로 확대한 것은 대표적인 고객 신뢰도 향상 조치로 꼽힌다.

◇ 한화 건설 부문 '수익성 개선' 시동

한화는 건설 부문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한화 전체를 놓고 보면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손실이 21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1조5565억원으로 13.8% 감소했다. 건설 부문만 놓고 보면 매출 9677억원, 영업손실 588억원이다.

㈜한화의 상반기 매출은 3조208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619억원으로 51.2% 증가했다. 회사는 건설 부문의 대형 프로젝트 준공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가율이 높은 도급 공사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올해 4분기 착공 예정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해 기술력을 쌓아온 게 주효한 데다 한화와의 합병으로 대외 신뢰도 역시 올라간 결과로 풀이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하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를 비롯해 내년 수서역 환승센터 등을 착공할 계획이다. 계약금액이 4500억원에 이르는 규모의 사업들이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서울 아파트 강세에도 '2년째 미분양' 1천가구

2022년 12월과 비슷한 규모
대부분 비역세권 소규모 단지
준공후 '악성 미분양' 526가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식지 않는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만 수요가 몰리는 '될놈될', 즉 똘똘한 한 채를 사둬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서다. 그런데 이같은 초강세에도 불구하고 2년째 팔리지 않는 아파트 수가 여전히 1000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서울 지역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95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약 1년 반 전인 2022년 12월(994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역 별로 보면 강동구가 304가구로 가장 많았고 동대문구(170가구), 강서구(14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526가구로 조사됐다. 지역 별로 강동구(246가구), 강서구(146가구), 강북구(41가구), 광진구(35가구), 양천구(33가구) 순으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및 분양가가 상승곡선을 타며 일부 미분양 단지가 완판되는 모습과 대비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상승해 2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분양가 상승세 또한 가파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3.3㎡(평) 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02%, 전월 대비 8.28%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세에 따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들도 최근 온기를 띄고 있다. 실제 경기도 광명시에서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은 지난달 2일 미분양 물량 총 16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오전나구역에서 선보인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 또한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그러나 '안될안(안 될 놈은 안 되는)'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마에스트로'는 77가구 중 58가구, 길동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 1, 2'는 64가구 중 62가구, 80가구 중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는 등 1000가구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과 반대로 서울 미분양이 1년 반 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의 규모나 입지, 분양가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서울 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들은 가구 수가 적은 소형 '나홀로' 단지거나 비역세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팔리지 않는 물량도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 영향으로 수도권 일부 미분양이 해소되는 것과 반대로 서울 미분양이 1년 반 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의 규모나 입지, 분양가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서울 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단지들은 가구 수가 적은 소형 '나홀로' 단지거나 비역세권에 위치해 수요자들이 외면하는 곳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팔리지 않는 물량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서울 내 미분양은 대부분 입지 여건이 좋지 않고,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높아 구매 후 가격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 홀로' 아파트라고 보면 된다"며 "이러한 단지들 때문에 서울 분양시장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려면 취득세 감면, 장기 미분양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행해야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평 4억대 대단지…수도권 실수요 잡는다

■ 용인 둔전역 에피트
저렴한 분양가·커뮤니티 관심

분양 탐방



용인 둔전역 에피트 모형도

A·B 등 3개 타입이 마련돼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는 68㎡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소평 평면임에도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됐고 드레스룸 공간과 펜트리 공간 등 수납공간에 신경을 쓴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둔전역 에피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분양가를 꼽았다. 이 단지의 3.3㎡(평) 당 평균분양가는 1417만원으로 △전용 68㎡ 3억9700만~4억3100만원 △전용 84㎡ 4억5600만~4억8800만원 △전용 101㎡ 5억500만~5억4000만원에 책정됐다. 올해 용인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면적 대비 최대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국민평형 분양가가 4억원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대단지인 점도 마음에 들고 교통도 나쁘지 않아 청약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지난 23일 용인 둔전역 에피트 견본주택에서 만난 50대 남성의 말이다. 이 아파트는 1275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4억원대(84㎡기준) 저렴한 분양가와 우수한 교통환경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가 있었다.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전용 68㎡A·B, 84㎡A·B, 101㎡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는데 견본주택에선 68㎡A, 84㎡

50대 관람객 A씨는 "집이 견본주택 근처라 방문하게 됐는데 분양가가 정말 저렴해서 놀랐다"며 "4억원대로 수도권에 네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아들 부부한테 청약을 권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 관람객 B씨도 "최근 용인 아파트들이 반도체 호재로 분양가가 너무 높아졌는데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 것 같다"며 "4억원대 분양가는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인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416만㎡) 등이 계획돼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으로, 용인 부동산 시장이 현재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단지 규모에 걸맞게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방문객들에 관심을 끌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물론이고 사우나 피트니스, 필라테스장, 키즈카페, 파티룸, 독서실, 공유오피스, OTT룸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차대수도 1746대(세대 당 1.35대 1)로 넉넉한 편이다.

입지를 보면 단지 근처에 하나로마트 포곡농협 본점과 명주병원, 둔전체육공원, 삼계공원 등이 있다. 경안천 수변공원, 포곡체육공원, 정수산도 인근에 있다. 둔전초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포곡중·영문중·고림중·용인고·포곡고·고림고가 가깝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마구산이 위치해 세대 50% 이상은 마구산 조망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역세권 입지는 아니다. 가장 가까운 역인 용인경전철 둔전역이 도보로 20분 이상 걸린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에 들어서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다음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THE NEIGHBORS HONORS CLUB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당신의 선택
지금 굿네이버스와 함께해 주세요.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나눔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문의 02 · 6424 · 1782 / 1826
홈페이지 goodneighbors.kr / 이메일 gnmc@gni.kr

美 기준금리 인하, 해리스에 호재 될까

대선 7주 앞두고 9월 금리인하 현실땐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져
통화정책 전환 이뤄질땐 역대 2번째 기록…1976년 민주당 승리
트럼프, 대선 전 금리인하 반대 입장…파월과 연준 행보에 촉각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가 9월에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확실시되자 여당인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통화정책이 정치와 독립적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을 약 7주 앞두고 9월 18일 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연준이 대선 캠페인 마지막 몇주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피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고용시장 보호가 최우선임을 명확히 했다"고 24일 평가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한 반면 고용이 하강할 위험은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22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 바로 다음 날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이는 최소한 1976년 이후 대선을 2번째로 짧게 남겨두고 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대선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위대한 역사의 다음 장을 열자"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그러면서도 대선이 있는 해 금리 인하가 시작된 전례가 없지 않으며, 통념과 달리 반드시 여당이 승리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1976년 대선 당시 아서 번스 연준 의장은 대선을 약 4주 앞두고 첫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당시 야당인 민주당(지미 카터)이 여당인 공화당(제럴드 포드)을 이겼다.

대선을 약 9주 앞두고 첫 금리 인하가 이뤄졌던 1984년 대선에서는 현직인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비스포크 인베스트그룹은 9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대선일에 가장 근접한 인하가 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에는 11월 4일 대선을 앞두고 10월 8일과 29일 각각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린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버락 오바마)이 여당 공화당(존 매케인)을 꺾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미 대선 캠페인이 절정이지만 파월 의장과 연준에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자들은 대선과 연준 금리 정책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했다가 한발 물러서면서 최근 "내가 (금리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사람들처럼 금리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20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팀스터즈 조합원들 AFP=연합뉴스

"트럼프" vs "해리스"…갈라진 美 거대 노조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 노조 위원장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일반 조합원들은 반발…분열 거세

미국 트럭 운전자 노동조합인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International Brotherhood of Teamsters)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두 쪽으로 갈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노조 위원장 션 오브라이언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편들고 나서자 일반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강력한 노조인 국제 트럭 운전자 연대(이하 팀스터즈)는 1903년 설립됐다. 현재 트럭과 버스 운전사, 항공사 조종사, UPS 운전사 등이 소속된 조합원 130만명의 노조다.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찬양하며 팀스터즈가 어느 정당에도 신세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좌파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을 알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양 당의 극단주의자들이 내가 이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노조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브라이언의 연설에 반발한 수십명의 팀스터즈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 무대에 올라 바이든 대통령의 연금 정책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 오브라이언 위원장은 오르지 못했다.

오브라이언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메시지 게시판이나 팟캐스트 등에서 그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대담에서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들을 해고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분열이 더 거세졌다고 WSJ은 전했다.

팀스터즈 조합원인 릭 스미스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션 오브라이언은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요란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는 자신을 이용하도록 허락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이 노조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분열됐는지를 보여주며, 지도부뿐 아니라 일반 조합원 중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WSJ은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환영했지만 또 다른 조합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분명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팀스터즈의 내부 분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동자 관련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무역과 이민에 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팀스터즈를 포함한 노동 계급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그가 대통령일 당시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 공석을 재계 쪽 변호사들로 채운 적이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친화적인 변호사들을 NLRB 위원으로 임명하고 해리스 부통령에게 노조 결성·단체교섭 촉진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 책임자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팀스터즈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는 취임 뒤 860억달러(114조원) 규모의 고용주 연금 구제금융 계획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에 서명했다. 이 기금의 40% 이상이 은퇴한 팀스터즈 조합원 35만명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아울러 일부 팀스터즈 조합원은 상의하달식이고 보복성인 오브라이언의 지휘 방식을 싫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우크라, 독립 33주년 맞아 '신형 드론'으로 러시아 공격

젤렌스키 "새로운 보복 성공"
"푸틴, 역겨운 노인" 비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형 국산 무인기(드론)로 러시아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33주년 독립기념일인 2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우리의 새로운 무기 팔랴니차를 오늘 처음, 그리고 성공적으로 전투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무기가 "침략자(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보복 방법"으로, 기존에 사용해온 자국산 드론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발표는 우크라이나가 이달 6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기습해 진격을 이어가며 깜짝 승전보를 올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이 드론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무엇이 자신들을 공격했는지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팔랴니차는 우크라이나 전통 빵 이름으로, 러시아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이 포함돼 있어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이 검문소 등에서 자국인과 적군을 구별하는 암호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팔랴니차의 사양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무기 생산 책임자인 올렉산드르 카미신 전략산업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드론이 고속 정밀표적 발사체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카미신은 "우리는 박격포 드론, 포격 드론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무기인 로켓 드론을 소개한다. 팔랴니차는 오늘 일시 점령된 지역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에 성공적으로 사용됐다"고 적었다.

더타임스는 이 드론이 제트엔진과 강력한 탄두를 장착했으며 기동성이 좋고 속도가 빠르다고 묘사됐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형 드론으로 정확히 러시아 어디를 공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서남부 보로네시 지역의 탄약고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탄약고를 공격했으며 일반적인 드론의 프로펠러 소리가 아닌 제트엔진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역겨운 노인'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그는 텔레그램 영상 메시지에서 "빨간 단추(핵무기 발사 버튼)로 모두를 계속 위협하는 붉은 광장의 역겨운 노인은 자신의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보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합당하고 대칭적이며 장거리이다. 그들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러시아 연방의 어디든 도달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재로 러시아와 115명씩 모두 230명의 전쟁포로를 교환했다고 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돌아온 자국군인들이 육군, 해군, 주방위군, 국경수비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는 동안 붙잡힌 군인들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나의 쓰임에 한계를 두지 말고, 기회와 가능성의 바다로 나아가라"

프로이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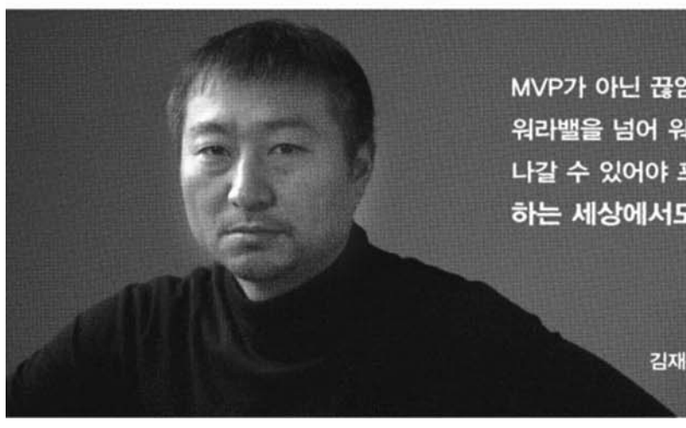
불안한 마음으로 멈출 것인가,
새로운 기회로 나아갈 것인가

일의 불안과 의심을 넘어 나아가는 법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성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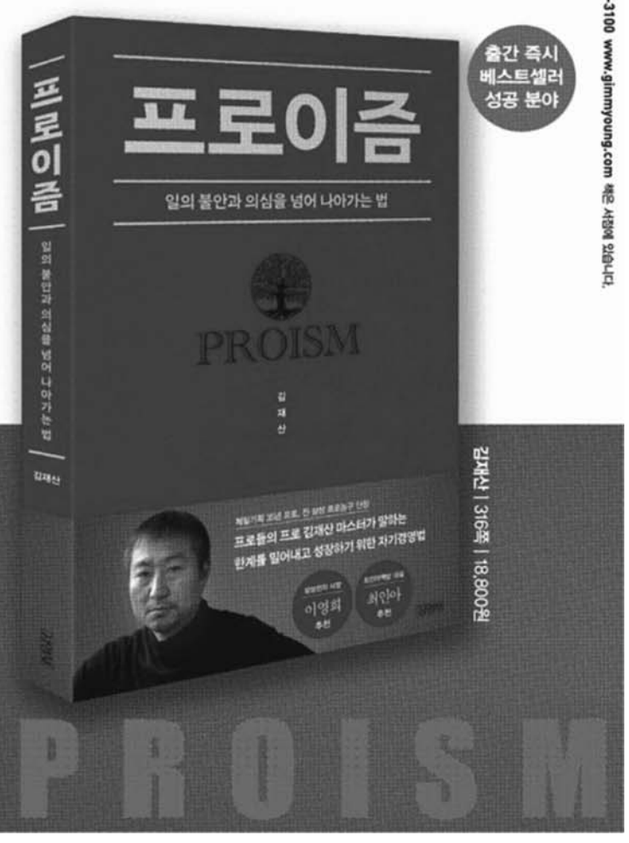
삼성전자 사장 이영희 추천

최인아책방 대표 최인아 추천



MVP가 아닌 끊임없이 성장하는 MIP가 되라. 프로는 자격이 아닌 일에 대한 태도이다. 워라밸을 넘어 워라인으로, 내 삶과 일을 스스로 통제하라. 일의 길을 노련하게 운전해 나갈 수 있어야 프로다. 직장인들의 구원투수 김재산 프로 마스터가 말하는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가 되기 위한 7가지 자격과 8가지 훈련법

김재산 | 제일기획 35년 프로, 글로벌 체험 마케팅의 프로 마스터, 전 삼성 프로농구 단장.



김재산 | 316쪽 | 18,800원

"청약 무용론, 정부 대책 안통해…충분한 주택공급이 답"

INTERVIEW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대책들뿐이라 역부족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월용청약연구소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월용(월급을 용돈으로) 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박 대표는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청약 맞춤 수업' 등 부동산 재테크 책을 쓴 청약 전문가다. 청약 강사 중 드물게 예상 경쟁률과 가점표를 제공하고 있어 청약 수요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원자재·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단지들로 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당첨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대표는 "원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라 몇년 사이에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분양시장의 키워드는 양극화"라며 "고분양가 단지는 외면을 받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단지로만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이중 51만8279명(78.4%)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로 몰리는 이른바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박 대표는 "분양가 폭등을 촉발한 핵심 원인인 공사비 급등이 여전하고 시공·안전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며 "분양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쏠림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표의 지적처럼 많은 수요자들이 고분양가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까지 생겨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상제 아파트가 분양될 때 수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로또 청약' 붐이 일고 있기도 하다. 특히 분상제가 집값 잡기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해당 지역 공급 위축·전월세 축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분상제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속출하면서 수요자들이 내 집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대빵부동산과 월용청약연구소가 올해 두 기관의 SNS 회원 212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높다'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우 높다'는 응답이 20.8%를 기록했다. '분양가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2027년 이후 계속'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다. '2024년 하반기까지'와 '2025년까지'라는 응답도 각 17.5%씩 나왔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 따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청약 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2550만6389명 대비 1만6526명 감소했다. 또 전년 대비 34만7430명 감소한 수치다.

박 대표는 "분양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당첨 후 자금 동원이 쉽지 않고, 가입자 가점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져 청약통장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리는 등 청약통장 가입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최근엔 연 2.8%에 불과했던 금리도 연 3.1%까지 높였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축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청약 통장 납인인정 금액을 늘리는 것은 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고갈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주택도시기금은 1981년(국민주택기금) 부터 주택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조성됐다. 재원은 주로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전입금 등으로 이뤄진다. 최근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0년 100조303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3년 새 4조8654억원(약 5%) 감소했다. 특히 2021년과 비교해서는 2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박 대표는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제도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점 인플레이션이 심화해서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의 범위를 종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1억6000만원(지방은 1억원)에서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지방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공시가격 5억원 이하) 중형 빌라나 단독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빌라 1채 소유자는 대부분 '무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청약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파주 운정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올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청약 물량이 많은 만큼 강남권 입성을 노리는 것도 좋은 선택지라고 밝혔다.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가 26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강남구 청담 르엘과 서초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등도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운정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입성을 노린다면 청약을 지속적으로 넣는 것이 중요하고 청약 기준이 까다로워 꼼꼼한 청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디에이치 방배에는 수만명의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디에이치 방배는 100대 1 이상의 경쟁률과 높은 당첨 커트라인이 예상된다"며 "당첨을 노린다면 비인기 평형에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분양가 인상에 청약통장 무용론 확산…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8.8 부동산 대책, 가점 인플레 심화시켜 내집 마련 더 어렵게 집값 상승 불안 잠재우기 위해 부작용 있지만 분상제 확대해야"

최종현 SK 선대회장 26주기 '조용한 추모'

최태원·최재원·최창원 등 가까운 가족만 모여 SKMS 재조명

SK그룹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26주기를 맞아 고인이 정립한 경영철학 'SK 경영관리체계(SKMS)'를 재조명하며 고인을 기렸다.


1982년 1월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왼쪽)이 신입사원 연수교육에 참석해 SKMS를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있는 모습.

25일 연합뉴스와 재계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 기일인 26일을 앞두고 지난 24일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가까운 가족이 모여 고인의 26기를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선지자였던 선대회장의 업적을 되돌아보면서 고인의 리더십을 널리 알리자고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2018년 최 선대회장의 20주기 추모 행사를 마지막으로 그룹 행사는 따로 열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별도 행사 없이 '조용한 추모'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선대회장은 1973년 최종건 창업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맡았다. 이후 1979년 SK 고유의 경영관리체계인 SKMS를 만들었다. 45년간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을 거듭한 SKMS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문화 역할을 해왔다.

최근 SK그룹은 경영전략회의와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에서 SKMS의 정신과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잇달아 강조하기도 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현대차그룹 'E-GMP' 전기차, 글로벌 충돌평가 휩쓸어

GV60 등 5종 유로 NCAP '별 5개'

美 IIHS서도 최우수·우수 등급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전기차 모델들이 세계 주요 충돌안전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5개 모델 △제네시스 GV60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차 아이오닉 6 △기아 EV6 △기아 EV9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별 다섯을 획득했다.

또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에서 발표한 충돌평가에서도 전 모델 TSP 이상 등급을 받았다.

E-GMP는 현대차그룹이 수십 년간 차체 기술 개발과 함께 승객 안전을 위한 노력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E-GMP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의 특성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설계와 구조를 더했다.


기아 EV9

배터리팩을 구조물로 활용하는 설계로 차체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차체 측면에서 배터리 바깥에 위치한 사이드실의 내부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적용해 측면 충돌 시에도 하부 프레임과 배터리 케이스 등으로 충격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차체와 배터리 간 8점 체결 구조를 적용해 견고한 결합을 이뤘으며 후방 추돌 시 리어 멤버의 변형을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하부 멤버는 핫 스탬핑 강판으로 보강해 세이프티 존의 변형은 방지해 배터리 손상을 방지하고 있다.

다중 골격 구조를 적용해 전면 충돌 시에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로드패스를 최적화했고 스몰오버랩과 같이 충돌 에너지가 전면부 일부에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더블박스 멤버 설계로 다중 골격 구조를 완성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진행된 IIHS 충돌평가에서 글로벌 자동차 그룹 기준 가장 많은 차종에 해당하는 총 20개 차종이 TSP 이상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충돌안전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전방위적인 탑승자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길병원 강성규 교수, 산재예방 공로 '근정포장'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인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성규 교수(사진)가 35년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25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유공 포상'에서 1989년부터 산재예방 분야에서 종사해 오면서 국내 산업보건의 제도와 정책의 기틀 마련, 한국인으로 120년 전통의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을 맡아 국제산업보건안전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인정받아 근정포장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수로서 직업환경의학 강의를 통한 후학 양성은 물론 2016년부터 가천대 길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장, 국민검진센터 소장을 거쳐 2021년 보건대학원장을 맡아 인천지역에 필요한 산재 예방 및 보건인력 배출에 노력했다. 강 교수는 길병원 부임 전에도 근로복지공단 직업병연구소와 안전보건공단에서 27년간 산재예방에 힘써 왔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anytoc@ekn.kr

LG U+ 디지털 콘텐츠 채널 '유잼', ICT 어워드 코리아 금상

정보 접근성·카피 독창성 등 우수

LG유플러스가 한국정보과학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가 후원하는 'ICT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디지털 콘텐츠 & 마케팅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 맞는 ICT 어워드 코리아는 웹·앱·디지털 플랫폼 등 ICT 서비스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내 최대 어워드다. △디지털 인사이트 △디지털 서비스 혁신 △웹·앱사이트 품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기술혁신 △디지털 콘텐츠 & 마케팅 6개 부문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보인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LG유플러스 디지털커뮤니케이션팀 윤지혜 선임, 이미소 사원, 이명연 책임, 김윤지 사원, 구수진 팀장(왼쪽부터) 이 수상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공식 웹사이트 '유플러스닷컴'과 공식 애플리케이션 '당신의 U+' 등 디지털 대표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채널 '유잼'이 △정보의 접근성 및 신뢰성 △카피의 독창성 △콘텐츠의 정량·정성적 평가 △콘텐츠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잼은 올 1월 디지털 대표채널에서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한 콘텐츠 채널이다. 통신 분야 특성상 고객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는 '통신 꿀팁' 콘텐츠 57편을 공개, 오픈 7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1172만 건을 기록했다.

전경혜 LG유플러스 디지털CX담당(상무)는 "고객이 통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디지털 대표채널에서 신설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채널이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디지털 채널 접점을 중심으로 MZ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화해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지속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경기도, 중소기업 '추석 자금' 200억 지원

추석 앞두고 유동성 위기 해소
업체당 5억 이내…오늘부터 신청


경기도청북부청사 전경

고물가-고금리 속에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원 규모 특별경영자금을 오는 26일부터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부진 장기화와 맞물려, 경기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는 도내 기업의 자금수요가 예년보다 많아 추석을 앞두고 기업에 노무비-원자재구입비-거래결제대금 등 유동성 공급 요청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2%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운영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2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억원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지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경기침체를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 보고회.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연구용역 완료 2024년 예산서 발간…탄소중립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선도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해온 광명시가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감축효과를 평가하고,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올해 3월 착수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2024년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예산을 분류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해 실제적인 탄소중립예산 수립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용역이다.

용역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예산 1조 2483억원 중 감축 예산은 전체 예산 중 5.8%인 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전체 2101개 사업 중 122개, 배출사업은 16개다. 나머지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과 관련이 없는 중립사업으로 분류된다.

광명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이 강제조항이 아닌데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예산제 운영은 강제성이 없다.

그런데도 광명시는 2023년 11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 전면 도입에 대비해 가이드라인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광명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부터 예산제를 본격화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와 배출사업에 대한 상쇄방안을 강구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서 재정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광명=강근주 기자

제20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 내달 5일~6일 개최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서
바이오헬스로 전시산업군 확대
134개사 참가 비즈니스 기회 제공


GMES2023 전시장 전경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제20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이하 '전시회')를 내달 5일과 6일 이틀간 원주기업도시 내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원주테크노밸리에 따르면 20주년을 기념해 기존 '의료기기'에서 '바이오헬스'로 전시산업군을 확대해 전시회 규모를 확장한다.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도내 최대규모의 산업전시회로 강원도,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테크노밸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강원지원단이 공동 주관해 의료기기 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인증전시회'로 공식 인정받으며 그 위상을 더욱 높였다.

올해는 '바이오헬스'로 전시산업군을 확대해 규모를 확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들에게 참가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고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바이오 등 국내 우수기업 115개사, 유관기관 14개사, 일본 기관(기업) 5개사, 총 134개사가 149부스가 참가한다.

또 해외바이어 100여명을 초청, 기업-바이어 1:1 사전 매칭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회 관람비는 무료이며, 오는 30일까지 강원의료기기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을 신청하거나 전시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현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원주=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화천군 주택보급사업 '속도'

신읍지구 공동임대주택 10월 입주

최문순 민선8기 화천군수 최우선 목표인 주택 보급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화천군에 따르면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동임대주택 입주가 사용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입주세대는 모두 120가구이다. 국민임대 100세대, 영구임대 20세대로 이미 지난해 입주자 모집이 완료됐다.

군은 내달 중 보도블록 설치 등 토목공사와 조경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입주 사전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5월 착공한 신읍리 648-1번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총 부지면적 8580㎡에 지상 7층과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 2동 규모다.

국비 등 총 183억원이 투입한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은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 주민카페, 경로당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된다.

지난해 국비를 확보한 사내면 고령자 복지주택 또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군은 지난해 7월 공모 선정 이후 지난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치고 올해 안에 LH와 기본협약 체결 후 내년 본격적 설계에 착수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주거와 교육지원, 돌봄 지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정책모델을 개발해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화천=박에스더 기자

해남군,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예타 통과

38.9km 구간 국비 1조5965억 투입

해남군은 지난 1968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60여 년 만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지난 22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한반도의 땅끝, 해남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은 강진군 작천면에서 해남군 북평면까지 38.9km 구간으로 국비 1조5965억 원이 투입된다. 1단계 광주 서구 벽진동 ~ 강진 작천까지 51.11km 구간은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 '중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고속도로 조기 완공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옥천면에 '해남 나들목'과 북평면에 '남해남 나들목'등 2개의 나들목(IC)이 생기고, 종점부가 해남군이기 때문에 명칭도 '광주~해남 간 고속도로(가칭)'로 변경될 전망이다.

고속도로 개통 시 해남에서 광주까지 40분대로 줄어들어 지역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토 최남단 땅끝까지 이어지는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남권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로망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 활성화는 물론 전남 서남부지역 물류 활성화 등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면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로 매년 142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전남도, 출생기본수당 신설 …내년부터 매월 20만원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신고 아동
18세까지 총 4320만원 지원받아

전남도는 '출생기본수당 신설'과 관련, 도 지급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지난 21일 완료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진행될 시군 지급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이후 태어나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이다. 부모와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가지 않는 한 오는 2025년부터 1~18세에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침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전남도와 시군이 수당을 지원하면 오는 2041년 통계청 추계 출생아 수보다 3099명이 더 많은 1만425명(29.7% 증가)이 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가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올가을 청도 여행 어때?

청도군, 추석 맞이 숙박쿠폰 발행



'청도 여행 어때 특별 숙박 쿠폰' 홍보 포스터

청도군은 종합여행·여가플랫폼 여기어때와 협업을 통해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시즌을 청도에서 즐길 수 있는 '청도 숙박 페스타'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가을 청도 여행 어때? 청도 숙박 페스타'를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숙박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고, 숙박 입실은 9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참여 숙박시설은 여기어때 플랫폼에 등록된 호텔, 펜션, 모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 75개소와 △청도 소싸움 미디어 체험관 △청도 레일바이크 △한국 코미디타운 △프로방스 포토랜드 등 10개 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박 할인은 청도군에서 지원하는 2만 원 할인권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쿠폰 2~3만 원으로 최대 5만 원의 할인 지원과 더불어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 혜택도 더 받을 수 있다.

청도=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울진 온정~원남 국지도 타당성 재조사 최종 통과

경북도, 69호선 미개통 11.7km 건설

경북도는 울진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경북도는 2030년까지 국지도 69호선의 미개통 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온정~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은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에서 매화면 갈면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1.7km의 2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12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구간은 현재 농로 및 임도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경북 유일의 미개통 구간으로, 도로 개설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증액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20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30년 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백암온천 등 온정면과 매화면 지역의 응급 의료시설 접근성이 9분, 도심 접근성이 19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사 과정에서 약 1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온정~원남 간 사업 구간은 2019년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곳"이라며 "2030년까지 1300여억 원을 투입해 조속히 완료할 것"고 밝혔다.

울진=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증설 없이 530톤 규모 결정"

2028년 준공 목표…소각시설 최첨단 기술로 현대화, 지역 명소로 탈바꿈


송도 자원순환센터 전경

인천시는 25일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이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생활폐기물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각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계획됐다.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된 이후 1년간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 규모와 공사비 등 총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KDI 검토 결과, 시설 규모는 하루 처리용량 530톤 규모로 결정됐으며, 총사업비는 건축·토목비, 시설비, 부대 경비 등을 포함해 2,648억 원으로 확정됐다.

KDI는 장래 인구 증가,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절적 변동성에 따른 필요 여유용량, 가동 일수 등을 고려해 적정 시설 규모를 530톤/일로 산정했다.

시는 기존 시설 규모 대비 하루 처리용량이 폐기물 차량 1대 분량인 10톤이 줄어들었지만 현대화사업 이후에는 현재 약 82% 수준에서 시설의 가동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반입 폐기물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향후 폐기물 처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은 더욱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디자인적 요소들을 반영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이 찾아오는 송도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바캉스 다녀왔더니…눈귀·피부·생식기에 질병 '후유증 고생'

■ 물놀이·자외선·피로감 따른 증세 사후 치료관리법

귀에 물 들어간 외이도염 방치땐 청력상실·난청 유발
휴가철 자외선 각막염 많아…헤르페스균 감염 '주의'
태양에 장기간 노출 피부 화상·기미…회복돼도 '자국'
임질·음부포진 성병 숨기지 말고 빠른 검사치료 필요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가 물놀이 후유증을 겪는 환자의 귀 속을 살펴보고 있다.

올 여름 무더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만큼 폭염을 피해 국내의 산과 바다, 강과 계곡, 또는 해외 여행지를 찾아 나선 피서객들도 많았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현상이지만 폭염이 극성을 부린 올해에 더욱 물놀이가 잦고, 태양빛이 강렬했던 만큼 질병 관련 휴가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놀이에 따른 눈병이나 귓병, 자외선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 다양한 비뇨기 계통 질병이 대표적인 휴가 후유증으로 꼽힌다. 휴가기간에 얻은 질병을 신속하게 치료관리하고, 휴가 피로증도 훌훌 털어버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소 귓병 치료 받았던 사람은 휴가 뒤 사후검진 필수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해수욕장, 강·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즐겼다면 외이도염에 이은 만성 외이도염 및 중이염 발생 우려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귀에 물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외이도염의 주요 증상은 부기, 통증, 가려움증, 발열감 등이다. 귓구멍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피부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더 악화하면 귓구멍이 막히고 귓바퀴 주위로 염증이 퍼져 귓바퀴까지 빨갛게 된다.

외이도염을 완전하게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귓속은 세균 또는 진균(곰팡이) 같은 감염원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어 고질적인 만성외이도염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곰팡이는 생명력이 강해 피부각질층 아래에서도 서식하므로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올라와 계속 가려움과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청력상실과 난청을 유발하면서 치료가 까다로운 중이염으로까지 진행할 수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는 "전에 만성 외이도염이나 중이염을 앓았거나, 특히 삼출성 중이염(귀의 중간에 삼출액이라는 체액이 찬 경우) 등을 치료했던 사람들은 휴가 때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전·사후 귀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강렬한 햇빛으로 검은 눈동자에 상처가 생기는 '자외선 각막염'도 휴가철 후 생기는 대표적인 눈 질환이다.

각막이 충혈되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올 수 있고 눈이 붓고 눈물이 흐르며 통증도 나타난다. 항생제 안약을 투여하고 눈 주변에 얼음찜질을 해 주면 대체로 며칠 안에 호전된다.

눈이 간지럽고 뻑뻑하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나 점막에 작은 염증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눈병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뻑뻑해지고 눈물이 자주 흐르는 증상이 더해진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각막에 파고들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각막에 구멍이 생겨 시력에 문제를 일으킨다.

◇피부 그을림은 점차 호전…기미·주근깨는 전문 치료 바람직

여름철 강한 햇빛(자외선·적외선)에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질환이 생기기 쉽다. 또한 일광화상을 입은 자리가 회복된 후에도 얼룩덜룩한 자국(피부 그을림)이 남아 고민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얼룩덜룩한 자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질환은 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임이석 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침착은 토닝레이저가 도움이 된다"면서 "멜라닌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일광화상에 의한 색소침착을 빠른 속도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에 따르면, 여름철 두피와 모발의 손상을 방치하면 가을철 탈모가 급격히 진행된다. 두피 염증이나 가려움, 비듬 등은 탈모증의 원인이므로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상된 모발은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기능성 샴푸와 컨디셔너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두피에 염증과 가려움증이 심하고 각질과 비듬이 많아졌거나 탈모증상이 생겼을 경우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본다.

◇임질·클라미디아·음부포진 감염 초기엔 증상 거의 없어

휴가지에서 '찜찜한 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찾아 소변검사, 혈액검사, 분비물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질염은 휴가 중 물놀이에서 가장 많이 감염이 되는 질환이다. 질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불쾌한 냄새, 소변시 통증, 외음부 가려움증 등이 주요 증상이다. 여름철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물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칸디다균'이 주범이다. 물 속에서 몰래 오줌을 누면 감염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를 보면, 질염 진료 환자수는 2019년 약 215만 명에서 계속 떨어져 2023년에는 약 170만명으로 줄었다. 반면에 질염 진료비용은 2019년 1492억원에서 계속 늘어나 1979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질염 초진 환자는 8월 약 22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40대가 63%를 차지했다.

전통적인 매독균, 임질균, 클라미디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헤르페스(음부포진 바이러스) 등은 잠복기간 동안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병에 걸린 줄 모른다. 감염된 상태로 배우자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맺게 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 경로를 잘 파악해 관련자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여성들의 경우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감염이 자궁내막염, 난관염, 난소염과 같은 모성을 갉아먹는 질병으로 악화할 수 있다. 성병이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검사를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금과옥조이다.

최근 늘어나는 성기와 그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음부포진(헤르페스)는 한 번 감염되면 평생 잠복하면서 병이 발현되거나 전염이 일어난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윤수 원장(이윤수·조성완비뇨의학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성병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수시로 재발한다"면서 "물집이 생겼을 때 감염 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증상이 발현됐을 때 성관계를 절대로 하면 안되며 키스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음모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성매개 기생충이 사면발니(이)다. 음모 부위가 따끔하고 가렵다면 사면발니 감염이 의심된다. 성관계뿐 아니라 목욕탕이나 찜질방, 숙박업소 등에서도 감염이 일어난다. 충체가 발견되면 충란까지 없앨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상복귀 뒤 규칙생활 중요…1주일은 생체리듬 회복 노력을

휴가 후 몰려오는 피로감을 풀고 원활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보자.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관절 또는 근육을 늘인 상태에서 10~2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산책이나 걷기, 조깅 등과 같이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어렵다면 지하철이나 건물의 계단 오르기라도 해야 한다. 쉽게 할 수 있고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어 적극 추천한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김원 교수는 "운동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너무 무리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리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강도가 높은 운동을 했을 때는 1~2일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 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짧은 휴가 기간으로 인해 휴가와 업무 복귀 사이에 여유시간을 가지기 힘들다면, 휴가를 마치고 직장 복귀 뒤 1주일 정도는 생체리듬을 직장생활에 적응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이 특히 중요하다. 다소 피곤하더라도 기상시간을 지키고,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쪽잠(낮잠 등)을 10~20분 정도 자는 것도 좋다. 휴가 후유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온몸이 무기력하며 아픈 경우에는 모종의 질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anytoc@ekn.kr

'난자 냉동' 시기, 30세 전후 최상…나이 젊을수록 효과↑

첫째아이 출산 평균연령 33세
냉동난자 3년새 4만→10만개로
노화되지 않은 난자 동결보존해야
부작용 가능성 있지만 위험도 낮아


▲ 마리아병원의 '타임랩스 배아 시스템'. 체외 수정하여 배양 중인 배아를 일정 간격으로 영상으로 남겨, 배아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 발달 속도에 따라 임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좋은 배아를 선별한다.

결혼·출산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면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난자를 보존하고 싶다'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건강할 때 난자를 보관했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적용된 현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첫째아이 출산 평균 연령은 33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건강한 난자로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의료기관에서 보관 중인 냉동 난자는 지난 2020년 약 4만개에서 지난해 약 10만개로 2.5배 가량 늘었다. 실제로 불임시술 전문 마리아병원이 이달 8일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에 개설한 '난자 냉동 팝업 스토어'에는 약 2주일 만에 1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와 상담을 받을 정도로 난자 냉동에 관심이 높다.

현재 국내에서 난자 채취 비용은 대략 300만원선, 난자 은행 보관 비용은 1년 20만~30만원선이다. 서울시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650명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 검사 시술비를 1회에 한해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20~49세 600명을 대상으로 난자 동결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난자 냉동의 궁금점을 일문일답으로 들어본다.

-난자 냉동에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노화되지 않은 어린 난자를 동결보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므로 가급적 이른 나이일 수록 더 유리합니다. 물론 20대 후반까지는 난자의 질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만 30세 전후부터 난자 냉동을 추천합니다. 개인의 병력에 따라(예컨대 난소종양, 수술력 혹은 각종 자가면역질환이나 암 진단, 조기폐경의 가족력 등) 더 이른 나이에도 시술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난자 냉동 시술 후 부작용은 없나요?

"난자채취과정에서 출혈·감염·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 위험도는 매우 낮습니다. 과배란 주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난소과자극 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체 시술의 5%이내로 발생하고, 시술 후 최장 10일~2주 이내에 완전히 소실됩니다."

-자궁내막증이 있어도 난자 채취 시술이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 수술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난자채취 시술이 가능합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합니다. 난자 냉동 시술이 가능한가요

"난자냉동은 생리주기에 무관하게 시술할 수 있으므로, 월경주기가 불규칙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리주기에 상관 없이 본인이 원하는 날부터 과배란 주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술을 위해 호르몬제를 맞으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피부가 나빠지나요

"과배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2kg 정도 체중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난자채취 후 최장 10일~2주 이내에 거의 사라집니다.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에서 일시적으로 피부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역시 난자채취 후 최장 10일~2주 이내에 거의 사라집니다."

-시술 과정이 많이 아픈가요

"일반적으로 과배란 주사를 10일 내외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피하주사이므로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난자채취 시술은 질초음파유도하에 바늘이 난소에 접근하여 이루어지므로, 수면마취를 시행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시술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난자동결을 위한 과배란 주사를 평균 10일 내외로 사용하게되므로, 일반적으로 최장 2주 이내에 시술이 종료됩니다. 난자채취시술은 수면마취하에 시행하며, 시술자체는 10분내외로 종료되고, 회복시간을 포함하여 2~3시간 이내에 귀가하며, 입원은 불필요합니다."

□ 도움말=이재은 산부인과 전문의(마리아병원 송파점·마리아플러스 진료과장)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인공와우 이식으로 '뇌 청각중추 회복' 청신호

고도난청 환자 달팽이관에 전극 삽입…청각기능·대뇌피질 회복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 교수가 고도난청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인공와우 이식은 보청기로도 효과가 없는 고도난청 환자들을 위해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삽입해 소리를 듣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최근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성인들에게서 청각기능뿐 아니라 뇌의 청각중추가 회복된 모습이 세계 최초로 확인돼 청각장애인에 희소식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 교수팀은 25일 "후천적 청각장애로 한쪽 귀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받은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이식 1년 후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분석한 결과 청각을 관장하는 대뇌피질의 부피가 이식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공와우 이식 후 뇌의 구조적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인공와우로 청각기능이 향상되면서 위축돼 있던 대뇌피질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최근 게재됐다.

연구팀은 인공와우 수술 전후의 대뇌피질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는 청각피질을 포함한 대뇌피질의 부피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대뇌피질이 회복된 정도가 청각기능이 회복된 정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뇌 상측 측두이랑의 부피 증가가 수술 후 단어 인식능력의 호전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을 확인했는데, 이는 청각능력의 향상이 뇌 청각 중추 구조의 회복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홍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후천적 청각 상실을 겪은 성인이 인공와우 이식을 통해 잘 들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뇌의 청각 관련 대뇌피질의 부피가 회복될 수 있음을 대뇌 MR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대개 나이가 들어 청력이 떨어지면 단어 인식능력도 저하돼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이같은 난청은 장기적으로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보청기를 일차로 사용해야 한다. 보청기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엔 인공와우 이식을 통해 난청을 치료할 것을 전문가들은 적극 추천하고 있다.

박효순 메디컬 전문기자

산업 탈탄소가 시급한 이유

김성우 칼럼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미국 국립 해양대기국(NOAA)이 지난 17일 발간한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77%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의 지난달 지표면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14개월 연속 매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이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제품을 국가간 교역할 때 과금하는 탄소무역장벽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하면서 영국 등 주변국들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탄소배출량을 미국의 제품 탄소배출량과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이어 지난 7월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려면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야하므로 이는 탄소무역장벽 설치의 신호탄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 탈탄소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필자는 지난 1월 유럽의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Montaigne Institut)가 주최한 유럽연합(EU)-아시아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탄소가격으로 인한 기업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동 연구소 산업 탈탄소 전문가인 조셉 델라태 박사를 한국으로 초대해 산업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3/4은 철강, 시멘트, 화학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3대 업종에 논의를 집중했다. 철강의 경우, 주요 감축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고철을 녹이는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와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직접환원(Hydrogen Direct Reduction)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청정전력 및 순수 고철의 확보와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이다.

시멘트의 경우, 주요 감축 기술은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slag)나 플라이애시(fly ash)로 시멘트 원료를 대체하거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로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대체제의 수급과 포집된 탄소의 활용처/저장공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화학의 경우, 화석연료 기반의 나프타 원료를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나프타로 대체하는 기술과, 공정연료를 재생전기나 청정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이 주요 수단인데, 문제는 역시 청정 원료 및 연료의 수급이다. 한마디로 수단은 있는데 장애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 탈탄소 추세로는 기후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탈탄소 기술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대표적인 공통 기술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인데, 최대한 빠르게 기술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탄소가격을 부과하면서도 보조금을 지불해 기술가격이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초기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하고, 바이오매스나 폐플라스틱 등 산업 탈탄소에 필요한 청정 원료 및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 또한, 모험 자본도 늘려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시장의 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조건 없는 사회책임 기금이나 다자간 은행의 양허성 자금 등 우선 손실을 감당할 모험 자본이 상업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기술, 정책, 금융이 동시에 산업 탈탄소 공통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산업 제품의 탈탄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상술한 공통 기술들은 한국에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하면 다른 국가나 기업이 먼저 상용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 기술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와야 하고, 이는 우리 제품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지금 공통 기술을 적극 상용화해 확보한다면 우리는 제품 수출은 물론 산업 탈탄소 기술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다.

티메프 회생,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기자의 눈



서예온 유통중기부 기자
pr9028@ekn.kr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다. 국내 이커머스업체 티몬과 위메프 2곳이 일으킨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지원대책의 성격이 티메프의 대금 정산을 전제(담보성)로 한 공공대출이고, 미정산에 따른 금융권 대출금에 물어야 하는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유예받는 것이어서 판매업체의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다. 회생절차협의회를 통해 자구안도 공개했다.

자구안은 티메프가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분할 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변제 후 출자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미정산 판매업자 약 10만명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피해 판매업체와 업계 모두 티메프 자구안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소액변제만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확실치 않고, 정산지연 대금 마련을 위해선 결국 기업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자구안에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피해 판매업체의 애간장은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 판매자 비대위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우리는 못 받은 대금을 받고 싶다. 정부 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결국 빚내라는 얘기 아니냐"고 일갈했다.

더욱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모회사 큐텐그룹은 여전히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는 모기업을 떠나 '각자도생'하려는 분위기다.

정작 피해 판매업체에 대한 구제안을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큐텐을 비롯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사태 장본인들은 자기 살 갈에 바쁜 행보를 보이는 형국처럼 보인다.

정부와 사태유발 기업의 움직임에 '무늬만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알맹이에 해당하는 '정산지연 대금'을 당장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들이 절망하는 이유이다.

큐텐그룹과 계열사들의 '기업 정상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금 미정산으로 당장 영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 판매업체들의 절박한 사정을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와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양 손목 위의 '갤럭시 기어'

데스크 칼럼

김 현 우
산업부 부국장



10년 전 쯤의 이야기다. 지금이야 갤럭시 워치가 애플 워치와 함께 스마트워치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됐지만, 2015년 즈음에는 갤럭시 기어라는 이름이었다. 둥근 베젤을 도입해 전통적인 시계의 감성을 강조했지만 삼성전자의 제품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이다.

당시 삼성의 행사 자리에서 H모 임원의 왼 손목에는 갤럭시기어가 둘러져 있었다. 회사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성능과 개선점을 직접 체험하라'고 지급했다는 설명이었다. 삼성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스마트워치니 그러려니 했다.

같은 해 연말 H모 임원을 다시 한 번 볼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도 왼 손목 위의 갤럭시 기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도 또 하나의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다.

양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찬 이유에 대해 그는 "개선된 새 모델이 나왔는데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나 알기 위해 사비로 경쟁사 제품과 새 모델을 구입해서 매일 차고 다니면서 비교해 본다"는 대답을 들려줬다.

이런 게 삼성의 경쟁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역할도 아니고 ICT에 민감하지도 않을 세대의 그가 두 개의 갤럭시 기어를 차고 비교하다니. 그는 심지어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임원도 아니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고전하며 '비상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원들의 주말 출근도 정례화 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삼성도 하는데'라며 이 같은 분위기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에서는 '자발적'이란 전제를 달지만 임원의 주말 출근이 조직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는지 의문이다. 비상경영이라는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시그널은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다음 문장은 무려 2012년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이다. 〈삼성전자는 그룹의 비상경영 차원에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평일 오전 6시30분에 새벽 출근을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말 출근까지 정례화 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다. 이 문장을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12년 전과는 위기의 실체와 시장의 상황은 천지개벽을 했는데도, 삼성은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이다.

'자발적 주말 출근'을 하는 삼성의 일부 임원은 사무실에서 직접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에 매진한다고 한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임원 승진 대상 간부들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주 6일 출근하는 임원을 보며 주말에도 초긴장상태다.

삼성의 주말 출근이 자칫 조직의 문화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이 되는 건 아닐까.

"혁신은 창의력과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이재용 회장의 선언에는 더 오랜 시간의 업무는 없다. 주말 출근과 상관 없이 혁신과 인재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는 한 삼성은 현재의 위기가 곧 기회였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

MS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위기 돌파에 역발상으로 대응했다. 그는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에게 시킨다. 그들은 항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가장 오래 사무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삼성 리더십은 '주말 사무실의 도시락'과 '양 손목 위의 갤러시' 어디에서 창의력과 혁신이 나오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 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대표전화 02-850-0114
대표팩스 02-867-0453
광고문의 02-6749-3124
구독문의 02-6749-3125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효 주필 신연수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정희택

· 정치경제부 02-6749-3118
· 산업부 02-6749-3114
· 금융부 02-6749-3172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전국부 02-6749-3119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 1989년 5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료
월 20.000원 1부1.000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 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skylife 188 KTolleh 219 SKBtv 504 LG U+ 173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http://www.welfarenews.net/



한 번 충전으로 3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
casper.hyundai.com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HYUNDAI

Bluehands
고객 곁에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서비스, 홈투홈 서비스, 긴급출동, 블루멤버스

■ 캐스퍼 전용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80-5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인스퍼레이션 (15inch): 복합 5.6km/kWh(도심:6.2km/kWh, 고속도로:4.9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315km(도심:347km, 고속도로:275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35kg | 등급: 소형 ▶ 인스퍼레이션 (17inch): 복합 5.2km/kWh(도심:5.7km/kWh, 고속도로:4.7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295km(도심:323km, 고속도로:262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55kg | 등급: 소형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